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각 집필자 소속기관의 공식 입장 과는 무관함.



2023-1 (No. 71), 2023. 1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사 회: 이 관 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발 표: 김 갑 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동 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양 문 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 정 철 (서울대 교수)

최 용 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이 병 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 원 곤 (이화여대 교수)

임 을 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 영 애 (길림대 교수)

이 상 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웅 현 (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

최 영 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 난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일 시: 2023년 1월 10일(화), 13:30~17:30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1층)/온라인



I F E 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목차

Ⅰ제1세션Ⅰ

정치

- 【발표】북한정치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
- 【토론】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1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 27

군사

- 【발표】2022년 북한 군사안보 분야 평가 및 2023년 전망: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 35
- 【토론】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49 박워곤(이화여대 교수) / 55

경제

- 【발표】북한경제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 67
- 【토론】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91 박영애(길림대 교수) / 97

| 제2세션 |

대외

【발표】북한의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 이정철(서울대 교수) / 105

【토론】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19 이웅현(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 / 129

대남

【발표】최근 북한 대남정책 평가와 2023년 전망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139

【토론】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57 리난(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 16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 171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 176 회원가입 안내 / 193



^{제1세션} 정치

발표

북한정치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제1세션: 정치분야 발표

북한정치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제8기 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총평

최장기 진행된 제8기 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술핵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확대, 핵선제공격 가능 시사' 등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 변혁적 전략'의 파장이 워낙 커 북한 대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강경한 군사전략과 대내 정치는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부족경제에서 과도한 국방력 지출은 대내 정치에서 정과 부의 효과를 같이동반하기 때문이다. 핵무력 강화와 대외 적대성 강화로 체제안전과 사회통제 분야에서 자신감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왜곡된 자원배분과 높은 긴장감 지속은 주민들의 피로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1) 사실 이번 당전원회의는 5개의 의정을 다루었는데, 그 중 조직문제,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문제, 새 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등 3개 이상이 당과 관련된 것들이라 대내 정치에 주안점을 둔 당전원회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대내

^{1) &}quot;낡은 사상경향(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군들 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 있다는 김정은의 비판 참고.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제8기 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비해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국방·대남·대미 분야 정책의 노출량이 증가하였고 그 내용의 강도가 매우 강했다. 이번 당전원회의를 총평하면, 위기의식 증폭을 통한 군사력 증강의 정당성설파와 동원체제의 불가피성 강조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당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2022년 12월 27일 『로동신문』을 통해 2022년 북한정세 총평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올해에 우리 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이 있다. 그것은 건국이래라는 표현이다. 그만큼 올해에 우리 국가는 이루 다 형언하기 어려운 간고한 시련을 헤쳐왔다. 우리의 전진을 기어코 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돌발적인 위기상황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 국가의 정상적 발전은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 적 없는 최대의 위협과 장애에 직면하게 되었다." 2) 당전원회의 보도문에서도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 "국가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 "제8차 당대회 이후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 등 "건국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위기"들로 점철된 한 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의 영도로 "뚜렷하고도의미 있는 진전", "당사업 강화,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극적인 변화",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혁혁한 발전" 등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들과 성과들이 정초부터 연말까지 다계단으로 이룩된 문자그대로 기적적 승리의 해"였다고 강변하였다. 그렇지만 '기적적 승리'에 핵국방력을 제외한 여타 분야, 특히 경제분야의 성과는 눈에 띄지않았다.

한편, 북한은 2023년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계획의 세

^{2) &}quot;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사적 사변들을 아로새긴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

번째 해이고 정전협정 70주년과 공화국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북한 사회주의 발전노정과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2023년 사업의 총적 방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 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 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 북한정치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2023년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경과하며 2026년 제9차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5개년계획 3년차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국경봉쇄 해제를 염두에 두고,

△ 김정은 권력 절대화 △당의 권위와 당정책의 집행력 제고 △ 사회적 통제와 동원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가. 당의 제도화와 혁신으로 당 통제체제 강화

1)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 책정

북한은 보도문에서 2022년 북한정치 분야에서 "전당적으로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관건으로 되는 중요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였으며 당의 백년, 천년미래를 담보하는 새 시대 당건설리론이 정립되여 우리 당을 전도양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언급한 새 시대 당건설이론은 다름아닌 2022년 10월 17일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한 "새 시대 우리 당 건설 방향과 당 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

- 5 -

(이하 "10.17 연설")라는 기념 연설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정예화된 면모와 혁명적 기풍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확신성 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지침"인 김정은의 "10.17 연설"을 이번 당전원회의를 통해 정식 당의 노선으로 책정하였다. 'ㅌㄷ동맹' 96주년에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당의 공식 노선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10.17 연설"에서는 지난 10년 간당건설과 당사업의 성과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고수하고계승한 것,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인 것,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 것 등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는 곧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보도문에서는 '새 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조직, 사상, 령도예술건설의 혁명적 진수와 내용, 고귀한 경험을 다 포함하면서도 당사업실천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에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소개하고, "당 건설에 관한 이론체계를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로 새롭게 구성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고 정연하게 하는 사업이 실행됐다"고 전했다.3 사실 5대 노선은 기존 조직건설, 사상건설, 영도예술건설의 내용을 5대 노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부각된 규율과 작품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규율 강화를 위해 제8차 당대회에서

³⁾ ①정치건설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심화, 대중의 충성심 강화, 각급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②조직건설은 당대열의 정예화, 민심에 긴밀히 대응하는당, 청소년사업 중시 ③사상건설은 사상사업 우선 원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들과 투쟁,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경향들과 비타협적인 투쟁④규율건설은 엄격한 규율 준수기풍감독체계·적용체계 수립 ⑤작풍건설은 당 결정지시 무조건 접수, 혁명적 사업기풍과 인민적 사업작풍 체득.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행위 근절 등을 기본요구로 하고 있다.

당중앙검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흡수통합하고 규율조 사부와 법무부 등을 신설한 바 있고, 간부혁신의 주요 내용은 작풍건설 과 연관된 내용이다. 이에 북한은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에 따라 "당 을 정치적으로 원숙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규 률에서 엄격하며 작풍에서 건전한 당으로 강화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2) 당회의체 정례화를 통한 당 영도력 강화

김정은은 "10.17 연설"에서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5년을 주기로 혁명발전과 자체강화를 견인하는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체계"를 마련했고, "당의 영도적 지위와 기능에 맞게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을 정기적으로 가동시키는 제도를 복원하고 그 운영을 개선"한 것을 그의 성과로 자랑하였다. 즉, "중요 당회의들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한 전당적인 투쟁방향과 로선, 정책을 제 때에 집체적으로 의결하고 그 집행정형을 주기적으로 총화대책함으로써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통일성과 계기성, 력동성과 철저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되었으며 당의 령도적 권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를 통하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전원회의들에서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령도방식"⁴⁾이 정착된 것 같다. 아마도 제9차 당대회는 제8차 당대회 5년 뒤인 2026년에 개최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반기 6월, 하반

^{4) &}quot;사설: 전당, 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토 의결정된 중대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2021.6.21.

기 12월에 각각 당 중앙위 전원회의(확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및 해당 연도의 전반적 국정운영 상황을 총화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패턴을 2023년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5) 또한 필요한 경우 정치국회의와 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를 제때에 개최할 것이다.

3) '일하는 당' 시현과 당정책의 권위와 집행력 제고

2020년 8월 개최된 제7기 6차 당전원회의에서는 제8차 당대회가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제8차 당대회가 2021년 1월 5일에 개막하여 1월 12일에 폐막한 이후 개최된 당전원회의도 이전 당전원회의보다 더 긴회기 동안 진행되고 있다. '일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2021년 6월 3차는 4일간, 2021년 12월 4차는 5일간, 2022년 6월 5차는 3일간, 이번 6차는 6일간 당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2023년 이후에도 상반기 총화 당전원회의는 3~4일 정도, 1년 총화 당전원회의는 5~6일 진행될 듯하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당전원회의에서는 총비서의 사업보고와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 토의가 각각 2~3일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즉 김정은 이 국정운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분과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정책실무단위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당중앙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김정은이 모든 분야에 대해 보고하고 결론을 내린 후 추인하는 형태로 분과별 토의가 활용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⁵⁾ 제8기 3차 당전원회의 2021년 6월 15일 개최, 제8기 4차 당전원회의 2021년 12 월 27일 개최, 제8기 5차 당전원회의 2022년 6월 8일 개최, 제8기 6차 당전원회 의 2022년 12월 26일 개최.

당전원회의에서는 당정책의 권위와 집행력을 제고하고자, 당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결정서 초안 최종 완성, 2023년도 국가예산안 검토, 2023년도 인민경제 주요부문 발전 관련 문제 토의 결정 등을 심의하였다. 당전원회의 기간 당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결정서 초안을 심의한 것은 처음인 듯하다.

또한 북한은 "당의 노선과 정책이 기층조직에 이르기까지 제 때에 침투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이 제시한 투쟁과업들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현장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먼저, 주요 회의를 확대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당정치국 확대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등은 이미 개최된 바 있고, 당전원회의도 지난 6월에 진행된 제8기 5차부터 확대회의였다. 이번 당전원회의도 확대회의로 진행되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간 당전원회의에는 통상 6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한다. 그런데 '확대회의' 형태로 열리는 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고,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 성·중앙기관도급 지도적 기관과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꾼들이 방청'하고 있어, 전원회의 참여 인원이 대략 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중앙과 각도 단위만이 아니라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꾼들까지 대규모로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현장 책임자들이 당정책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6)

다음으로 북한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 책임비서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사업을 철저히 당정책관철에로 복종지 향시키는 데서 나서는 원칙과 당사상사업의 실효성과 효률성을 제고" 하고자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지역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임으

⁶⁾ https://v.daum.net/v/20220609125403764 (검색일: 2023/01/01).

로써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정책을 최고위층에서부터 당의 말단부에까지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도당책임비서의 역할 강화는 자력갱생과 균형발전(농촌발전)을 뒷받침하고이를 위한 도별 경쟁특화 체제 도입, 즉 도당이 당정책 전달뿐만 아니라 인민생활 향상도 직접 챙기라는 조치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7)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도당책임비서가 도인민위원장을 겸임하였는데, 1990년 5월 국가정책의 최고결정기구인 중앙인민위원회를 도당책임비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8)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김일성은 "도당책임비서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데 따라 도의 전반적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며 도안의 인민들이 잘 먹고 잘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의고 언급한 것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4) 체제수호 후비대 결속: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이번 당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알려지지않고 있다. 아마도 2022년 10월 12일 김정은이 인민무력성 소속 엘리트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한 기념 연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주체위업의

^{7) &}quot;당의 경제정책집행을 행정일군들과 같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정책적 지도를 바로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23.1.4.

⁸⁾ 중앙인민위원회를 김일성(주석), 이종옥박성철한성룡(부주석), 지창익(서기장), 강성 산서윤석·조세웅·홍시학·최문산·김학봉·강현수박승일·림형구·렴기순·김기산·리봉길(이상 도인민위원장) 등 17명으로 구성.

⁹⁾ 김일성,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1989. 5.11., 13.

억년 청청함을 담보하는 핵심육성의 원종장이 되라"(이하 "10.12 연설")를 공식 당정책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방문 나흘 뒤인 10월 16일에도 만경대혁명학원을 재방문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을 격려했고, 재방문 전날에는 최룡해·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등 혁명학원 출신 당정 간부들이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여 "위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충심으로 되는 결사분투로 받들어갈 것"이라고 맹세하는 등 김정은의 혁명학원 방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정은은 "10.12 연설"에서 "주체혁명의 역군으로서의 성장기를 혁 명학원에서 거치였고 또 현재 거치고 있는 혁명가 유자녀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의하여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현시기 변 화발전과 장래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시기에 체제보위 후비대, 군사인재 후비대 양성의 중요성을 지적하면 서, 두 혁명학원이 "주체혁명의 원기둥, 뿌리를 억년 튼튼케 하고 그 위대한 정신력으로 전체 혁명대오를 정예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이므로, 그 기본임무가 "주체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갈 핵심골간후비, 주체 혁명위업수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둥감들을 육성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두 혁명학원이 "교수교양에서 전국의 본보기학 교. 다른 교육단위가 따라배우는 학교우의 학교가 되어야 하며 특히 우 리 인민군대를 첨단화된 현대적인 군으로 혁신하는데 이바지할 군사인 재후비들을 키워내는 것"을 중차대한 임무로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혁명 학원이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학원당조직들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의 철저히 수립,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고조, 강철같은 규율 과 비당적이고 비혁명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과 투쟁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총정치국과 국방성·총참모부에서 혁명학원의

교육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 실무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혁명학원들의 교육조건과 원아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당에 품들여 마련해준 교육시설들과 설비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여 교육환경을 일신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해결해 주라"고 당부하면서, 학원생들을 위무하며 내부의 군사적사상적결속을 다졌다. 이러한 체제보위:빨치산군사인재 후비세대 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강조될 것이다.

나. 김정은 절대권력 지속 강화

1) 수령의 지위 공고화

'김정은 수령' 공식화 과정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리일환 당비서가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통해 "경애하는 김정 은 동지는 … 인민적 수령"이라고 부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8차 당대회를 즈음하여 김정은의 현지지도 표식비 및 표식주 건립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이른바 '김정은의 혁명역사'가 북한 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김정은 집권 10년이 되는 2022년에 '김정은 수령'의 권력과 우상화는 지속 강화되었다.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그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열병식에 1950년대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대원수 계급으로 보이는 견장을 부착한 '원수복'을 입고 등장하였고, 이 열병식을 전후해 북한 매체들은 '만고절세의 영웅', '천출명장'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며 김정은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집권 10년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중앙보고대회개최, 선전 방송물 제작, 기념우표 발행 등 선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 12 -

특히, 김정은이 등장하는 대형 모자이크 벽화 설치가 10월 12일 처음으로 조선중앙TV를 통해 대내외에 공개('22.10.12)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당전원회의 보도문에서도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또한 당전원회의 기간 중인 12월 27일과 29일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사적 사변들을 아로새긴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 『로동신문』기사가 연재되는 등 그에 대한 찬양이 계속되었다. 이제 '김정은 수령'은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고 그에 대한 우상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수령의 연설을 당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당정책화함으로써 수령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된다.

2) 김정은 혁명사상 체계화 과정

김정은 시대에 걸맞은 독자적인 사상체계 정립 및 대내 선전 강화 등을 통해 이른바 '위에서 내리먹이는', 그리고 반복적인 애민행보 표출을 통해 '아래'로부터도 이루어지도록 견인하는 방법으로 김정은 혁명사상 일색화는 지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 매체에는 이른바 '당중앙의 혁명사 상'이라는 일반적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선대와 차별화되며 김정은 집권기에 걸맞은 새로운 사상이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일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을 시작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며 코로나-19 유입·확산을 공식화 ('22.5.12)한 지 이틀 뒤에 김정은은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본부당위원회에 기부했고, 이로부터 하루 뒤에는 평양 시내 약국들을 직

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른바 '애민행보'를 보이며 우리인민 제일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중앙의 혁명사상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지지 획득강화를 도모하였다. 북한이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2.26~28)와 당 제1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3.28~30)를 잇달아 개최한 것도 '당중앙의 혁명사상' 주요 내용을 최고위층에서부터 당의 말단부에까지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혁명사상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적 지침화, △혁명사상 일색화, △이론적 체계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0) 2021년 10월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 의사가 집대성된 혁명과 건설의 전략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이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 전당과 온 사회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11)

세 번째 체계화 과정도 시작된 듯하다. 2021년 10월 22일자 『로동신문』에 김정은 노작 12편이 소개¹²⁾되었고, 이번 당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의 연설이 결정서를 통해 공식 당정책화되었다. 이미 김정은 혁명사상의 핵심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 간 연계성이주장된 바 있다. ¹³⁾ 이번 당전원회의 보도문에도 "조선혁명의 불변지침

¹⁰⁾ 이기동, 김인태, "김정은 정권 구축과정과 향후 관심 포인트," 『INSS 전략보고』, No. 185(2022).

^{11) &}quot;새로운 전진과 력동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2021.10.21.

^{12) &}quot;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사에서 길이 빛날 탁월한 사상리론업적," 『로동신문』, 2021.10.22.

^{13) &}quot;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독창적인 인 민대중제일주의 사상, 주체사상을 내놓으신 것이다. … 동서고금에 수많은 정치가 들이 있었지만 인민대중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 있는 존재로 내

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당전원회의 기간 중 발행된 『로동신문』에는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전략,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대한 사상,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데 대한 사상,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할 데 대한 사상, △덕과 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완성할 데 대한 사상" 등 김정은의 사상이론이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14)

김정은 혁명사상의 체계화를 위한 기본 뼈대와 내용들이 차근차근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2026년경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김 정은 혁명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순수이데올로기와 김정은 혁명사상(김 정은사상 또는 김정은주의)이라는 실천이데올로기를 갖게 된다.

다. '사회주의 법치' 강화

이번 당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고 준법기풍 확립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이른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내세우며 각종 법·제도를 제·개정하여 사회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김정은의 권력 및 국가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의도다.

사회주의 법치국가에 대한 북한의 강조는 김정일 시대에 시작했으 며, 김정은 시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 법치국가'라는 표현은

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의 존엄을 빛내여주신 분은 우리 수령님 밖에 없다."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자," 『로동신문』, 2021.7.8.

^{14) &}quot;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혁명업적은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억년초석이다," 『로동신문』, 2022.12.30.

2003년 북한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같은 해 법률 전문잡지인 『정치법률연구』가 발간되었으며, 2004년 최초의 『대중용 법전』이 편찬·발간됨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김정은 시대 들어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더욱 전면화본격화됐는데, 1982년 이후 30년만인 2012년 개최된 '전국 사법검찰일군 열성자 대회'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천명하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은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의 주요 통치자원으로 부각되었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였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도 '법치'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기능하였다. 한편, 김정은 시대 두드러지는 사회적 통제 관련 법·제도는 인민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엘리트도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놓쳐서는 안 된다.

라. 사회적 동원운동 전개와 통제의 단계적 완화

이번 당전원회의에서는 국가부흥발전을 위해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사회적, 특히 청년층의 '노력동원'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농촌건설 및 식량생산 증대 등에 필요한 노동력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노동당의 선전부문일꾼, 유명 음악단 등을 지방 현장으로 내려보내고, 노동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 인민반을 통한 독려도 강화할 것 같다. 이러한 '노력동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제될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 및 청년들의 지방탄원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독려하고 '모범'을 내세울 것

- 16 -

같다. 조직화된 노동력 동원이 가능한 군대의 경제현장 투입 역시 지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또한 이번 당전원회의에서는 "인민대중의 사상문화. 생활문화 영역 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향후 국경봉쇄 해제과정에 서 중국 및 남한 등 대외 문화가 유입돼 자칫 체제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북한당국 은 국경봉쇄 해제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분위기 이완 등을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해, 부문사안별로 사회적 통제의 강도를 차등해 적용하며 단 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 같다. 전면적 국경봉쇄를 해제하는 과정은 강 력한 사회적 통제의 완화가 불가피하게 병행되는데, 이는 그동안 거의 완전하게 차단됐던 외부 문물이 매우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과 강력 한 사회적 통제로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시장 및 물류유통 부문 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급격한 사회 적 분위기 이완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사상 변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단속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른바 '우리식 생활양식'에 대한 강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민들의 실생 활과 직결되는 시장 및 물류유통 부문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약하 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 상당 폭 인사조치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단행된 인사 규모는 중폭이라 할 수 있다. 인사 규모가 비교적 컸던 지난 6월 제8기 5차 당전원회의 때와 신규임명자 (중복 포함)를 비교하면, 당·정·군 신규임명자는 53명에서 67명으로, 그중 당지도기관(중앙위, 정치국, 중앙군사위, 중앙검사위) 신규임명자도

- 17 -

34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났다. 15) 이미 상당 폭의 인사가 이루어졌던 제8기 5차 당전원회의 이후 6개월 동안 큰 정책적 변화가 없는데도,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인사 폭이 적지 않은 것은 일단 부정적 정책수행에 따른 문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것은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의 해임과 리영길의 임명이다. 리영길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당비서로 선출됐지만, 박정천의 보직 중 하나였던 당상무위원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후 큰 부침 없이 초고속 승진으로 2022년 4월 "원수'까지 올랐던 박정천의 낙마 배경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쨌든 북한이 지난해 국방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올해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당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상황에서 박정천의 해임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16) 박정천의 낙마 결과 당상무위원회는 다시 '5인 체제'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제8기 5차 당전원회의 때부터 김정은을 제외한 상무위원들의 호명 순서가 예전과 다르다. 2021년에는 최룡해-조용원 순이었는데 2022년에는 김덕훈-조용원-최룡해 순으로 바뀌었다. 아무래도 경제문제와 방역문제 등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할 듯하다.

한편, 이번 인사를 두고 '무력기관 지휘부의 전면 교체' 문책성 주장 은 과한 분석인 것 같다. 지난 6월 인사에서 국방상 리영길을 제외하고 총참모장에 리태섭, 총정치국장에 정경택, 사회안전상에 박수일, 국가

¹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 분석,"(2023. 1.1.).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에 숫자 오타를 수정하고 중복 포함을 명기했음.

¹⁶⁾ 북한이 "2023년을 전쟁동원 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고 새로 도입한 공세적 전략전술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야전·작전통 리영길을 기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지금까지 국방부문을 잘 이끌어왔던 박정천의 낙마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인기·고체연료 관련설도 너무 시의적이다. 정책실패부패 또는 건강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위상에 리창대로 사실상 무력기관 지휘관들을 모두 교체했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는 국방상이 승진함에 따라 그 자리에 강순남 당민방위부장을 임명했고, 총참모장과 사회안전상을 6개월 전 자리로 복귀시켰다. 업무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일 수 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는 도당책임비서 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김정은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당(김수길), 황남도당(박태덕), 강원도당(백성국) 책임비서를 신규 임명했다. 김수길은 평양시당과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박태덕은 황북도당 책임비서를 맡았던 인물들이다. 특히 박태덕은 농업담당 당비서로 일한 바 있는데 대표적 쌀 생산지인 황해남도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전 총정치국장 김 수길이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전 당군수공업부장 유진이 당중앙위원으 로 보선된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1세션: 정치분야_토론 ❶

토론문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관심 포인트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의제와 총화보고 보도량의 불균형 시현으로 경제건설 성과 부진 시사
 - 의제는 주로 대내용이었으나 총화보고 보도내용은 대외 메시지 에 방점
 - 경제건설 성과 독려, 내핍과 동원 필요성 강조, 사상 및 정신력 강화와 같은 대내 메시지보다 국방력 강화에 기초한 국위와 국 력 증대, 전략국가로서의 자부심과 같은 대외 메시지를 부각한 것은 경제건설 성과 부진을 호도할 목적
 - "당사업 강화,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극적인 변화" 문구에서 경제건설 성과가 빠지고 총화보고 순서에서 경제 보다 국방을 우선시
- 새로운 당건설이론에 기초한 5대 당건설 방향을 노동당의 당건 설노선으로 책정함으로써 노동당을 명실상부한 김정은의 당으로 확립
 - 김정은이 지난해 10월 17일 중앙당 간부학교 강연에서 당건설 5대방향을 제시하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를 당건설노선으로 책정한 것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계승을 넘어 새로운 사상과

- 영도체계로의 발전과정의 일화
- 김일성은 사회주의 당건설 업적, 김정일은 노동당의 기초축성 업적(수령의 당 건설)에 이어 기존 정치, 조직, 사상에 작풍과 규율을 추가한 김정은의 새로운 노동당 건설 업적 만들기 차원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수령과의 보조일치 강조)
- 동시에 김정은주의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주의를 구성 하는 사상, 이론, 영도방법 중 이론작업화의 일화
-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를 전원회의 의정으로 상정함으로써 김정은의 '후대사랑'과 '후대관'업적 과시 및 내일을 위한 오늘의 희생 감수 독려
 - 김정은의 '후대사랑'은 김정은집권 초기 핵심 정치담론으로 활용했던 김정일애국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
 - 당시 김정은은 어린 나이라는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후대사 랑과 후대관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미래세대의 안 전과 행복를 위해 오늘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것을 주문하는 선전논리로 주로 활용(50년대정신과 연계)
 - 세 차례에 걸친 김정은과 김주애 사진 공개 역시 김정은의 후대 사랑과 후대관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해석 가능 / 이를 후계 자설과 연결 짓는 것은 시기상조
- 집단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준법투쟁과 사회주의 법치 국가론
 - 김정은시대 들어 공산주의 목표가 부활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 주의의 핵심 운영원리의 하나인 집단주의 기풍(또는 미풍) 확립 을 적극 강조

- 북한이 의미하는 집단주의는 개인과 기관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수직적 집단주의와 앞선 사람이 뒤처 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수평적 집단주의로 구성
- 준법투쟁과 법치국가론은 개인과 기관의 본위주의와 특수주의 및 비·반사회주의 현상 등 집단주의를 저해하는 여러 폐단과 문제점들을 척결하여 수직적 집단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로써 강조
- 특히 집단주의는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애국주의 또는 사회주의애국운동과도 밀접히 연관
- 2023년 주요 정치행사에서 조선인민군창건 75주년(2.8)을 제외 하고〈일당백〉구호 제시 60주년(2.6)을 포함
 - 작년에 유사 행사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4.25)은 김일 성 출생 110주년(4.15)과 연계하여 열병식 개최 등 대대적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전에 예정된 주요 정치행사로 언급되지는 않음.
 - 올해도 두 행사를 연계하여 2월 초에 국방력 강화노선의 정당 성을 과시하기 위해 열병식 등 정치행사를 개최할 가능성 존재

○ 박정천 해임 이유에 대한 해석

- 박정천 해임을 둘러싸고 업무상 과오(남측의 무인기 대응) 및 현 정세를 고려한 전문성 인사(포병보다는 작전전문가가 필요한 시기)로 해석이 나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정보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예단보다는 합리적 추정의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
- 우선 업무상 과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무인기 대처와

- 의 관련성은 합리성이 다소 떨어짐. 우리에 대한 무인기 침범 성공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함. 오히려 무인기 대처 과오 때문 이라면 북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피해야 하는 시점임.
- 전문성을 고려한 교체일 경우 필요한 보직만 교체하면 되지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인민군 총참모 장,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서 모두 하직할 필요는 없음. 신 임 박수일 총참모장이 박정천이 물러난 직책을 모두 승계한 것도 아님.
- 따라서 무인기 대처가 아닌 다른 업무상 과오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이유를 열어두고 판단해야 할 것임.
- 후반기부터 김정은 40세 생일 분위기 고양을 통한 체제 결속 도모
 - 김정일의 경우 1982년 40회 생일을 기점으로 수령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신문에 김정일의 생일을 경축하는 기사를 보도하 는 등 '수령의 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실시
 - * 1995년 2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김정일 생일을 경축일로 지정(1992년 50회 생일에 추진하려 했으나 김정일의 사양으로 3년 지연) / 2012년 1월 12일 정치국 특별보도로 광명성절로 지정
 - 김정은의 경우 본인이 수령인 상황에서 2024년 1월 8일 40회 생일부터 경축일이나 명절로 지정하고 매년 대대적으로 기념할 가능성이 있으나 김정일처럼 김정은의 의례적 사양으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
 - 이를 위해서는 금년 말부터 생일 경축 분위기 고양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체제 결속의 계기로 활용할 전망 / 약관의 지도자에 서 성숙한 지도자로의 위상 제고 기회



제1세션: 정치분야_토론 ❷

|토론문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대해서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 총평

- 김갑식 선생의 '총평'에 동의
- 김정은 총비서가 3일간에 걸쳐 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보도'는 지극히 제약된 내용. 분량적으로도 부족.
- '한미에 대한 적대 관계' 강조와 '전술 핵무기의 다량생산'과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라는 임팩트가 강한 도발 적인 언설에 의해 어려운 '국내 문제'를 호도.
- 김갑식 선생의 말씀대로 전원회의의 대내정책의 최 중점 과제 는 '당의 통제체제 강화'
- 이번 '제6차 전원회의''의 진짜 문제점은 '발표되지 않은 문제' 속에 존재

○ 경제건설

- 2023년은 '5개년계획'의 3년째 중간 해: '5개년 계획'은 1, 2년째의 경제정체로 '5개년계획'도 심한 미성 취로 끝날 것이 확실. 그러나 '보도'는 그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시종. 2022년을 '승리의 해'라고 총괄하고 있는 이상, 현시점에서 부정적 평가는 어려움.
- 김정은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 보장"과 "인민생활 향상"의

제반 과제를 제시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불명

-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와 '12개 중요고지들'란 무엇인가? * 각 분야별 수정된 2023년 달성 목표 명시 가능성
-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표한 것은 '건설 부문'만.
-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1회만. 대신 '자립의 사상', '자력의 원칙' 등 * 하지만 워칙적으로는 '자력갱생' 노선을 계속

○ 농촌문제

- '새로운 농촌혁명강령', 모델주택건설, 경제관리개선 등을 언급
- 그러나 1년 전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의 성과, 결과를 언급하지 않음.
-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 생산 목표'에 대해 서도 언급 없음.
- 재작년부터 시작한 '밀·보리 농업'에 대한 언급도 없음.
- 농촌에 대한 당적지도의 강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 식량 사정은?
- 코로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서의 '승리'를 강조했는데, 왜 언급하지 않았는지?
 - 중국에서의 대유행의 영향?
 - 북한으로의 코로나 유입에 대한 불안?

○ 당 건설 문제

- 김갑식 선생의 지적대로, 2022년 10월은 당 건설 강화에 중점을 둔 기간

- * '10.12 연설', '10.17 연설', '모자이크 벽화 보도'(10.12), '노동 신문'의 지도이념 관련 보도 다수
- * '신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에 창조성이 있는지는 의문
- * 지금까지의 3 아이템을 5 아이템으로 재편한 정도로, 새로운 사상은 느껴지지 않고, 인민의 심금을 울릴지 어떨지는 의문(우상화 작업의 일 과정인가?)
- * 당 조직의 '상의하달' 기능 약화 → 기층 조직에의 직접적인 작용 (당세포비서·초급당비서대회의 제도화)
- '김정은 수령의 공식화 과정'과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
 - 김정은에 대한 '수령' 호칭 처음 등장은 2020년 10월 '노동신문' 과 '근로자'의 공동 논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인 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 현재가 '체계화'의 단계라는 것에 동의
 - 그러나 체계화는 간단하지 않음.
 - 문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이념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의 언설에서는 '계승과 발전'이지만 김정은의 의식으로는 극 복하고 싶다는 의식
 - '인민생활의 향상' 없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는가?
- '사상'과 '주의'를 어떻게 보는가?

○ 대외관계, 핵·미사일

- '대미'. '대남'을 '대적투쟁'으로 규정
- 남조선은 '명백한 적'
- 한미일 '3각 공조' → '아시아판 NATO'
- '신냉전'의 인식 확인
- '억지로서의 핵' → '공격하는 핵' → '선제사용 가능성'
-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 개발(고체연료 ICBM?)
-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과 '핵폭탄(핵탄두)의 기하급수적 확대'
- '군사위성 발사'
-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 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일본 등?)
- → 2023년, 2024년은 군사도발로 국제사회와 긴장격화는 불가피함. 당분간은 2023년 봄의 군사위성 발사,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 한 대응

○ 조직 문제

- 박정천 해임
 - * 김갑식 선생의 말씀대로 '공격적 전략·전술'을 위해서 하거나 무 인기·고체연료 관련설도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에 동의. 어떠한 정책적인 실책의 인책 사임이 아닌가
 - *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후임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복권은 어렵지만, 다시 복권할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닌지
 - * 군부 인사는 전문성이라는 점은 느껴지지만, 그렇다면 왜 6개월 만에 직책을 바꾸는지 의문
 - * 인재난 속에서의 '회전문식 인사'

- 리용호 숙청

- * 한성열 외무차관의 실각(숙청?)과 함께 북한 외무성의 대화 그룹 에 대한 공격
- * 남북관계에서도 '대화일꾼'의 모습이 사라지고 대미, 대남 모두 상대의 논리를 읽고 해석하고 그 분석 위에서 '51 대 49'의 협상 을 하는 '대화일꾼'이 없는 것은 국제 사회에 큰 불안 요인



제1세션 **군**人

발표

2022년 북한 군사안보 분야 평가 및 2023년 전망: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제1세션: 군사분야_발표

2022년 북한 군사안보 분야 평가 및 2023년 전망: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1.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총평 및 군사안보 분야 특징

- 북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2022.12.26.~12.31./당 중앙위 본부 청사)의 목적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확정명시함"이라고 언급함.
 - 5가지 의정 토의 및 결정서 채택
 - 1.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 년도 사업계획
 - 2. 조직문제
 -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
 -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
 -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
 - 2019년 이후 세 번째로 신년사 없이 전원회의로 대체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최장기간인 6일간 실시하면서 정치국회의를 병행 실시함.

- 전원회의 결과 보도가 경제분야보다 군사분야 성과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 경제분야 성과는 당초 설정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됨.
 - 전원회의 관련 보도의 첫 문장이 지난 2022년 1월 1일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보도와는 달리 대단히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북에게 2022년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 "가장 어려운 고비", "시련에 찬 2022년", "국기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라며 이를 극복한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함.
 - 2022년 성과로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성과와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언급 없이 핵무력정책 공식법화 및 국방력 강 화와 대적 투쟁의 성과를 우선 언급하고 강조
 - 2022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 비싼 승리"이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 으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했다고 자평
- 대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을 연결해 자주적이며 공세적인 대남, 대외부문의 중심과업 제시하 고, 대미보다 대남 대적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구체화함.
 - 북은 현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어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이에 맞게 대외사업 원칙 수립 및 미국에 편승하여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게 경종을

- 울린다며 다극화 추진 세력과의 적극적인 연대 모색
-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투쟁의 중심 표적으로 선정한 것은 미중 대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문제의 정책우선순위가 떨어져 있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고 판단
-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쏠려 있는 현 한국정부를 대적투쟁의 주타겟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한반도 위기 고조및 군사적 충돌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코 자신들이 불리하지않고 오히려 미국을 대단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임.
- 5개년계획의 세 번째 해인 2023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 과업 을 제시
 -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어 5개년계획의 3년차 중간인 2023년을 대단히 중요한 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이를 전후하여 성과를 가시화하고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야전과 작전분야 출신으로 군사부문 주요 인사교체가 이루졌다는 점에서 향후 대남·대미 공세적 대적 행동과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
 - 당 군사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박정천의 해임 은 문책성 경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후임에 군단장 등을 역임한 야전·작전통인 리영길을 임명
 - 총참모장으로 발탁된 박수길 역시 군단장,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

장 겸 작전총국장 출신 작전통이며 국방상에 임명된 강순남도 군 단장 출신

-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군수로동계급의 600mm초대형방사포 증 정식을 진행하고 김정은이 직접 답례연설를 통해 군사분야 성과 부각 및 국방공업의 군수와 민수 병행을 강조
 - 증정식 이전 제2경제위원회에서 초대형방사포의 성능검열을 위한 검수사격을 진행하였고 1월 1일 새벽에는 실제 작전배치된 서부 지구 장거리포병분대에서 실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성능을 대내외 에 과시함.
 - 김정은이 증정식에서 '남조선 전역 사정권'이며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공격무기'라고 언급한 초대형방사포 30문을 추가 인도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전술핵 무기체계가 작전배치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단순히 군사적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 위력 강화의 복합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원회 의에서 전승절(7.27), 일당백 구호제시 60년(2.6)을 언급한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2018년 병진노선 결속 및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전환 이후에도 군수의 민수로의 전환보다 국방공업에 무게를 두고 민수공업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을 계획한 것으로 보임.
 - * 군수로동계급에 대해 "국방공업전선이 들고일어나 무려 5,000여 대의 농기계들을 우리 협동벌들에 내다세워 농업전선을 강력히 지원"했다며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타격무장인 600㎜초대형방

시포 30문을 우리 당에 증정"하였다 치하함.

- 10월 하순부터 30문을 생산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증산투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증정식을 통해 증산운동과 속도전의 새로운 대중운동 강화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2. 2022년 군사안보분야 분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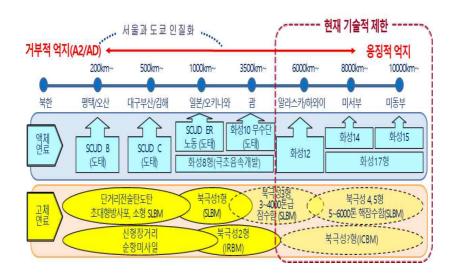
-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에 대해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평가
 -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를 통해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했다고 언급한 점에서 대미억제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을 표출하려는 의도로 보임.
 - 핵무력정책 공식법화가 당의 투철한 자주적대와 자위사상의 과시 라고 강조하며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발전의 궤도 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력을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한 안보우려 해소이 자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대결하 새로운 진영화 속에서 전략적 자 율성을 확보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
-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을 연결하여 달성된 변화들에 대해서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방향으로 연결
 - 국방력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강세를 확실히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게 대외정책과 한반도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
 - 특히 국방력 강화를 통해 "다사다변하고 격돌하는 국제정치정세

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당의 국익수호, 국위제고의 기본원칙이 훌륭히 관철"되었다고 언급한 점은 국방력 강화의 이유와 정당성을 국제정세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

-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적 도 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2023년 국방력 강화의 중대한 결 단 천명
 -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실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하여 북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고 한미일 군사협력강화 대해서도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아시아판 나토》"라는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함.
 - 한국에 대해서는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자세로 도전해나서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북 군사대응을 비난
 - 북을 "정조준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신무기 개발 및 시험 발사 등 군사적 행동의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
-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운용전략의 구체적 이행 강조
 -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핵교리 법령화와 동일 선상에서 핵무력 선제사용을 시사
- 억지의 3대 조건(3C)인 ①의사전달(Communication, 금지행위와 위협 존재를 상대국에 명확히 알림), ②역량(Capability,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③신뢰성(Credibility,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 중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핵교리 법령화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
- 핵무기의 선제 및 보복사용 조건을 구체화했지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 자체를 북한 스스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할 수 있어 오히려 핵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북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일 수도 있음.
- 핵무력 강화를 위한 전술핵 운용 현실화와 질량적 강화 재강조
 - 전원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해서 북을 주적화한 상황이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 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개발을 통해 완성에 이른 신형전술무기(KN-23·24·25 등)들의 양산 및 실전배치가 보다 가속화 될 것임을 시사.
 - * 이미 북한은 2022년 가을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서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 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인다는 것은 핵무력의 생

존성 차원에서 2격능력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핵무력의 사용을 전략적인 응징적 억제(미본토 타격) 뿐만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거부적 억제(한반도와 역내)에도 배분해 사용하기에 충분한양을 가지겠다는 의도로 김정은 시기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선택적 재랙식 무기의 현대화 병진을 바탕으로 핵과 재래식 억지력의 배합전략 확장이라고 할수 있음.



- 현재 북한의 핵분열물질은 핵탄두를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여 개까지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전문가별로 차이가 크나 통상 30~40여 개 핵탄두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함.
 - 현재까지 재처리로 추정 플루토늄(Pu) 생산량은 약 60kg이나 핵 실험으로 약 20kg 사용하고 약 40kg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핵탄두 약 10여 개(1개당 4~6kg) 제작 가능

- * 2016년 이후 5MWe 원자로 가동으로 내부 연료봉 8,000개 재처리 시 Pu 20kg 추가 추출 가능
- 고농축 우라늄(HEU)은 현재 400~900kg까지 보유량에 대한 견해차가 크며 이는 핵탄두 약 20~90개(1개당 12~25kg)에 해당하는 보유량임.
 - * 원심분리기 2,000여 대 운영 시 연간 HEU 30~40kg 생산가능하며 최소 4,000여 대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분산 설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현 증가 추세로 2026년 이후에는 최소 1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북의 핵분열물질 보유량 증가는 비핵화를 사실상 불가 능하게 할 뿐 아니라 향후 북이 핵군축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음.

3. 2023년 군사안보분야 전망

- 주요국방정책과제에 있어 2023년도에 점령해야 할 무장장비개발 과 생산목표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2021년 당대회를 통해 제 시한 국방공업의 과업 중 2021년과 2022년에 보여주지 못한 것 이나 완수하지 못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 시한 "새 년도에 점령해야할 무장장비개발 및 생산목표"에 따라 진행할 가능성
 -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최우선 5대 전략과업」 추진 현황

과업내용	진행 상황 확인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영변 핵시설 및 우라늄농축 시설 가동 중 핵단두의 양적 증가 지속 예측	
15,000km 사정권내 명중률 제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2022.11.18. 화성 17형 발사 성공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정상발사 예고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 최초 발사 2022. 1.5 / 1.11 2차/3차 시험발사	
수중 및 지상 고체 ICBM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	2022.12.15. 대출력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 * 북극성5형 엔진으로 평가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8차 당대회시 연구종료 및 최종심사단계 주장 *추가 진행시항 미확인	

-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대출력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시험 당시 김정은 총비서가 "최단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고체연료엔진을 이용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보임.
- "새 년도에 점령해야할 무장장비개발 및 생산목표"에 따라 예상되는 2023년 북한의 군사분야 추진 과업
 - ① ICBM 발사(화성17형)의 실거리 발사를 통해 대기권재진입 기술 확인 및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실시
 - ② 신형 잠수함 진수(3,000톤급) 및 이미 설계연구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핵잠수함관련 과업 공개 가능성
 - ③ 지금까지 바지에서만 발사한 북극성3형 SLBM을 실제 잠수

함에서 발사하거나 소형SLBM(KN-23 수중발사용)을 중형 잠수함무장현대화 목표에 따라 개조한 로미오급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

- ④ 2022년 12월 15일 실시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기반으로 신형 고체 SLBM(북극성 4/5형) 개발 시험 발사 및 보다 큰 대구경(직경 3m)의 ICBM급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 가능성
- ⑤ 개발이 진행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보다 기술이 진전된 시험발사가 이루어지거나 완성 및 작전배치 수준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으며,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와 무인정찰탐지수단 등에 대한 국방정책과제 들도 지속 추진 예상
-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완전 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북은 이미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 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었다고 주장
 -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새로운 핵교리를 법제화하고 전술핵운용부 대까지 조직해 훈련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개발이나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기술적 이유로 제7차 핵실험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탄두 개발을 위 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핵실험보다 ICBM 실거리 발사나 핵 탑재가 가능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한국이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

- 대화 재개 요구나 제재 완화 등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 카드를 쓸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무엇보다 진형화 된 국제구조 하에서 제7차 핵실험이 미국이 주도 하는 국제적인 핵 확산 틀과 규범을 흔들어 미국을 곤궁으로 몰고 반미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해 북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미중의 전략적 갈등 심화와 한반도 위기가 높아질수록 점증할 것임.
-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과 9월 공화국창건 75주년에 대규모 열 병식과 신종무기 공개 및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주목
 -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반 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언급
 - 지난 12월 18일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시험을 진행하고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점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이전 실제 발사할 가능성이 있음
- 2023년에도 대남·대미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 원칙 하에 물리적 힘을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데 대한 구체화된 대응방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현 미중 대결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명확히 진영화된 국제 관계 구도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에 경사되어 전략적 자율성을 확장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이나 북미대화에 기대를

- 버리고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 대응방향이 보다 구체화된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무극적 진영논리의 신냉전 구조 속에서 북은 이미 정권 생존과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을 보장받았고 미국 주 도의 대북제재의 틀이 무실화 되었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를 바탕으로 서구 중심의 대북 압박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해 우리 군의 주요 훈련 일정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빌미로 군사적 행동 수위를 더 욱 높여갈 것임.
 - 2023년에도 지상병력은 코로나 상황과 건설동원 등으로 군사훈 련은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전략군과 포병 위주의 미사일 발사훈련 및 대비태세 강 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전술핵미사일 전력의 작전 배치 및 운용전략전술의 구체화를 위해 단거리 3종 세트인 KN-23, KN-24, KN-25(초대형방사포)의 훈련 성격의 발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도 있음.
- 북의 핵과 미사일 강화를 통한 강대강 및 정면대결 및 대외 전략 적 자율성 확장전략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상호 강경한 군사적 맞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어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및 한반도 위기 가능성 점증
 -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대외적으로 미중의 전략적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결과를 쉽게

- 예측할 수 없고 대북제재의 지속, 북이 생각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성 결여, 비핵화 협상의 부진 등으로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 관리가 어려운 상황
- 북은 미중대결 심화 속에 한국과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며 북이 먼저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굴복하거나 호응할 가능성 역시 희박
-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북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이나 한국 에게 대화와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움
- 북은 올해에도 강대강 원칙 하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 발사 등의 원인을 미국과 한국에게 돌리며 군사 행동의 명분과 정당성을 마 련하고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배치, 한국군의 활동 등에 대해 비례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임.
- 핵과 미사일을 자주외교의 틀 속에서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장해 나가고 대내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위한 필 요충부조건으로 활용할 것임.
- 북의 의도에 대한 몰이해 속에 정치적으로 손쉬운 군사적 대응만을 고집할 경우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위기와 함께 군비경 쟁과 안보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기관리와 능동적이고 유연한 선제적조치가 필요함.

제1세션: 군사분야_토론 ❶

토론문 북한 군사분야 평가 및 전망: 김정은의 전술핵 및 핵물질 증강 발언을 중심으로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1.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22.12.26.~12.31.) 요지
 -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
 -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수호 실패 시)선제 핵사용 불사 시사(示唆)
 - 고체연료형 ICBM 개발 박차
 - * 기존 화성-15형, 화성-7형 등은 액체연료형 사용
 - *** 신형 단거리 미사일(KN-23, 24, 25), 북극성 시리즈를 고체연료 형으로 개발
 - **** 추력이 140tf(톤포스 · 14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힘)의 고체엔진 지상 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2022.12.15.)

○ "강대강(强對强), 정면승부의 대적(對敵)투쟁원칙에서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對美), 대적(對敵)대응방향이 천명(闡明)"(『로동신문』, 2023.1.1.)

〈표 1〉 북한 핵탄두 및 핵물질 평가

기관 종류	美 핵 과학자회 (BAS)	스웨덴 SIPRI	日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 센터(RECNA)	美 국방대 산하 국가전략연구소 (INSS)	韓 국방백서 (2020년)
핵탄두	20-307]	207]	407]	15-60	-
핵물질1)	-	45~557]	-	-	Pu 50kg ²⁾

^{*} IAEA에서 핵무기 1기(20kt: 히로시마는 15kt)의 'Significant Quantity'로 플루토늄은 8kg, HEU는 25kg로 분류

2. 북한의 의도

- 억제용 (전술)핵무기를 엄포가 아닌 실체적 도발 가능성을 높여 역내 긴장을 조성한 후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
- 핵전략을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은 투발 수단의 표준화, 규격화, 다종화

^{***} BAS: 2022.9; SIPRI: 2022.6, RECNA: 2022; INSS: 2020.11; 헤尹: 2021.4(38North)

¹⁾ U-235 또는 Pu 239

²⁾ 핵탄두 6~7기 분량

(多種化)를 의미3)

- * 북한 핵탄두는 SRMB,4) MRBM,5) IRMB,6) ICBM,7) SLBM8) 등에 탑재
- **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폭발력이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다양하며, 폭발력 조절이 가능(dial-a-vield)
-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Pu, HEU 등 무기급 핵물질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전제로 하기에 <u>농축, 재처리 시설을</u>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 2023년은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整週年)으로 전술핵 성능시험 을 위한 핵실험(7차) 예상
 -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수준은 직경 1m², 탑재중량(payload) 1,000kg로 노동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수준. 미국 본토를 겨 냥한 ICBM에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목적으로 핵실험 실시할 듯함(최현수 외. 2017: 356)
 - *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돐(9.9),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7.27)

³⁾ 북한은 총 13종·1,200여 기 미사일을 보유 중이며, 그중 탄도미사일은 9종·1,000여 기로 추정. 최현수 외,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인 북한 미사일』(서울: 경당출판사, 2017), p. 49.

⁴⁾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사거리 1,000km 이하(KN-02, 스커드 B/C/D 등)

⁵⁾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사거리 1,000~2,500km(노동계열 미사일)

⁶⁾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사거리 2,500~5,500km(무수단, 북극성)

⁷⁾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 5,500km 이상(대포동계열 미사일)

⁸⁾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3. 윤석렬 정부의 대응책

- 강대강(强對强) 대결 지속 * 2024년 총선
 - 3축체계(Kill Chain,⁹⁾ KAMD,¹⁰⁾ KMPR¹¹⁾)보강 목적으로 합 동참모본부 산하 '핵·WMD대응본부' 창설(2023.1.2.)
 - * 전략사령부가 출범(2024년 예정)하면 '핵·WMD대응본부'를 흡수
- 한·미동맹 공조체제 강화('핵전력 공동기획과 공동연습')¹²)에다 한·일관계 복원을 통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
 - 북한 핵무기 사용 억제 차원에서 한·미 공동으로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와 모의훈련(table-top exercise)" 13) 실시 예정
 - * '프놈펜 선언'(2022.11.13.)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 가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4. 평가 및 전망, 그리고 기타

○ <u>전술핵이 전쟁을 종식하거나 영토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u> 하지는 않음. 대신에, 전술핵 역시 핵무기이므로 방사능, 낙진,

- 11)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북한 지휘부 참수작전
- 12)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2022년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
- 13) Table-Top eXercise(TTX)은 도상훈련 또는 토의식 연습으로 실제 현장에서 군부대가 기동하지는 않는 일종의 모의훈련을 지칭

⁹⁾ Kill Chain: 선제타격

¹⁰⁾ Korean Air Missile Defense: 하층방어체계

- 충격파(shock wave), 환경오염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해피해 발생은 필연적임.
-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거미줄을 만들어 한국을 가둬두려는 전략을 취하지만 오히려 <u>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갇혀 빠져나오지</u>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음.
- 그러나,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반복적인 위협은 그 자체로 무기 사용의 한 형태임. 김정은의 독재적인 권력을 감안할 때 그의 발언은 집단 자아 측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의 위협은 결코 느슨한 수사법이 아님.
- * 집단 자아는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심리적인 구조임. 집단 자아는 위기의 순간에 편집증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와 그의 추종자 사이에서 발전하는 심리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
- 북한 외화 주 수입원이 197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한 탄도미사일 수출임을 감안 14) 미사일 실험발사는 계속 이어질 것임.
 - * 북한 전략무기 5대 과업: ①국초음속미사일 개발 ②대륙간탄도미 사일(ICBM) 능력 제고 ③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④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⑤군 정찰위성 개발
- 북한 핵무력 성공지표를 핵탄두의 소형화, 액체 추진체에서 고체 추진체로의 전환, 운반체의 재진입(re-entry) 성능 및 정밀성, 적기(適期)의 폭발력, 실전배치 등을 종합평가할 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수준이 완성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김정 은으로서 핵무기 탑재 미사일개발은 일모도원(日暮途遠)임.

¹⁴⁾ 북한은 노동1호(MRBM) 기술을 이전하는 대가로 파키스탄으로부터 핵융합 기술과 원심분리기 기술을 확보

- 한편, 북한 핵무기 선제 사용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파기를 공식적 으로 표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동시에,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저)농축 권한 확보 필요. 협상 시 취할 원칙으로,
 - ①농축 문제를 한·미 간 여타 현안과 연계하지 않으며 ②농축의 타당성(feasibility) 검토는 외교적 대응과 학술적 대응으로 병행하고 ③국제규범상 허용되어 있는 농축의 주권적 권한과 글로벌 비확산 원칙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④농축의 평화적 이용을 분명히 하면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차원에서 국제기구의 접근 보장

제1세션: 군사분야_토론 ❷

|토론문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1. 2023년 북한 군사전략: 정면돌파전의 연속

-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공포한 대외전략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정면돌파전'의 연속
 -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과 같은 해 10월 생존권과 발전권을 선 보장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운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통해 노선을 천명한 바 있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를 재확인
 - 정면돌파전은 '사상무장'을 강화하여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 도움 없이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견디면서, '핵능력'을 최대한고도화하여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까지 '장기전'을 수행한다는 기조
- 정면돌파전에서 천명한 핵능력 고도화 확인
 - 2018년 4월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선포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유예를 20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처 음으로 파기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노선 전환**(『로동신문』, 201 8.4.21.)
 - 김정은은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

- 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라면서"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라고 주장(『로동신문』, 2020.1.1.)
- 2022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도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를 개발"하고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천명(『로동신문』, 2023.1.1.)
- 신냉전을 소환하여 대미 및 대남 전략 장기전 강조
 - 정면돌파전을 소개하면서 "당은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라고 장기전을 선포
 - 김정은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 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것이 우리 의 억센 혁명신념"이라면서 타협의 여지를 제거(『로동신문』, 2020.1.1.)
 - 이번 전원회의는 신냉전을 소환, 김정은은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지역이 평 화와 안정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을 제시 (『로동신문』, 2023.1.1.)
 - 냉전이 내포한 구조화된 장기전 속성을 도출, 특히, 2021년 8 기 4차 전원회의와는 달리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재천명하고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 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방향이 천명되였다"면서 행동 계획을 밝힌 것도 2022년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긴장 조성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로동신문』, 2023.1.1.)

- 북한이 "신냉전"과 "다극화"를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 고 립에서 탈피하고 유엔이 불법화한 핵개발에 명분을 확보하 기 위한 의도적 강조이다.
 - 2022년 유엔 안보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 기능 부전을 보인 것을 북한은 신냉전이라는 구도로 치환하여 고착화하려는 시도이다.
 - 그러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하였지만,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 핵심 동맹국이 다시금 단합하는 계기도 되었다.
 -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동조화한 상황에서 제재 해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9차례 유럽국가가 만장일치로 대러 제제를 부과한 상황에서(확인할 것),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해제는 명분이 없다.
-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북한이 그리는 북중러 대(對) 한미일 대결 구도, 세계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대(對) 권위주 의 국가 구도는 냉전과 같은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 자유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적 정합성도 부재하고, 진 영 내부 결속과 진영 간 절연성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 **탐색과 조정**: 미중은 갈등 중이지만, 미소 냉전과는 다르게 경제 및 다분야에서 완전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 진영 내 결속도 권위주의 체제를 단결하게 하는 가치가 부재하고 진영보다는 지역화 현상이 도출되고 있다.

- 북중, 북러, 중러 등 양자 관계도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기반 하기보다는 편의에 따른 결합이라는 역사가 현시기에도 여 전히 유효하다.
 - 따라서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한 단기 협력은 가능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런 측면에서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가 유지되고 강화된다면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해제는 요 워할 것이다.
- 결국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은 희망적 세계

2. 김정은 '과시의 정치' 부각

- 경제 성과 도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군사 업적을 최대한 부각하는 '과시의 정치'를 통해 업적 선전
- 제한된 경제 성과
 - 2021년 말에 개최된 8기 4차 전원회의는 6대 과업 중 하나로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제시하였고, 김정은이 각 산업별 목표 를 설정하는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중시
 - 그러나 2022년 12월 8기 6차 전원회의는 2022년을 결산하면 서 경제 분야에 성과 제시 실패, 경제관리 개선에 대한 언급도

전무했고, 2023년 계획 측면에서도 주택건설 외에는 구체 방 안을 미보도

- 대신"남의 기술에 의존하려는 사상적 잔재"를 신랄히 비판하면 서 "1960년대, 70년대 투쟁 정신과 기치""천리마 운동"을 소 화하여 주체에 기반한 자력갱생과 노력 동원을 강조
- 연초 산업별로 목표를 제시해 온 관행과 2023년은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3년 차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감안할 때 이번 전원회의에서 언급이 부재한 것은 북한 당국도 올해 경제 성과 도출이 어려움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실패한 자립경제 노선을 강조하고 경제를 정치화하는 대중동원 기제를 통해 50년 전으 로 회귀 시도

○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의 의미

- "군사적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 위력 강화의 복합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김동엽 교수) 중 전자에 비중
- 북한은 "기습적인 다련발정밀공격능력을 갖추었으며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것"이라는 발표에문제 제기 가능
- 다연장 능력 확인 불가: 과거 4연장 시 최대 연발 발사는 3발, 발사 간격도 불규칙
- 남한 전역 사정권 의문시: 400km로 사거리로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진 배치해도 남한 전역을 타격하기에 부족
- 전술핵 탑재 능력 미확인: 미사일에 비해 구경이 작고 동체가 길어 탄두 중량이 무거운 핵탄두 탑재 가능성 의문

- '과시의 정치'로 600mm 방사포 활용
 - 전원회의 기간 중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증정식을 통해 군사 분야 업적을 부각하여 경제 성과 부족을 만회하려는 시도
 - "우리 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타격장비들이 이 나라 창건이 래, 당창건이래 력사상 처음으로 당중앙뜨락에 도렬", "세상에 없는 주체무기를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끓어넘쳐서일것입니다."(김정은, 2022.12.31.)

3. 2023년 북한 군사전략 전망

- 북한의 핵 질주와 한반도 긴장 조성의 복합 도발 예상
 - 2021년 8차 당 대회 때 채택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 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수행
 - "핵 무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 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고체 연료화하고 탄두 소형화, 다탄두탄, 재진입 기술 등을 발전
 - 한국, 일본, 괌 등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 수를 증대, "국방발 전"측면에서 드론과 같은 비대칭 재래식 무기 개발도 강화하 여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관찰(『로동신문』, 2023.1.1.)

-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 증가 가능성 여부
 - 북한은 원심분리기 생산 능력이 있으므로 소재, 부품, 기술 이 제공되면 생산능력 향상 가능
 - 그러나, 북한은 ①핵물질을 이미 최대치로 생산하고 있고, ②추가 기설 건설 혹은 확충을 위한 소재와 부품은 대북제 재로 반입 제한
- 대남·대미 대화는 여전히 적대시 정책 선 철회를 명분으로 최대 한 거부
 - 북한이 대화의 선 조건으로 제시한 대북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발전권'과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영구중단, 종국에는 주한 미군 철수도 포함하는 '생존권'은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미가 수용할 수 없음을 북한도 인지
 - 대화 의지 없이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 면서 장기전수행
- 경제난에 따른 북한 내구성 악화 시 '피포위 의식' 고취를 위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 배제 불가
 - 북한에 익숙한 방식으로 주변 위협을 최대치로 부각하는 '피포 위 의식'을 활용하여 난관 돌파
 - 예를 들어 김여정이 작년 12월 20일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고 대대적인 과시에 나설 수 가능성, 이는 사실상 미 본토를 겨냥한 초고강도 도발로미국의 강경한 대응에 직면
 -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관계를 '대적'으로 규정하고 "구체화된

대응방향"을 수립했다는 발표를 감안할 때 한미가 정상화할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제한된 국지 도발 감행 가능성도 배제 불가

-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총동 원체제를 강화, 위기 극복 시도

4. 북한 군사전략의 의미

- 핵 능력 제도화를 통해 비대칭 확전 우세를 추구
 - 미국을 상대로 한 '보복 확실성 태세(assured retaliation posture)' 확보 하계
 - 미국 본토 방어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 탄두탄을 탑재한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보해야 하 나 기술적 능력 부족
 - 최종 성공하더라도 막강한 미국의 보복 공격 능력에 대응하여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추진잠수함과 핵 탑재 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필요하나 현재로서 는 요원
-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 확보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지 만, 대체재로 '비대칭 위기 격상 상태(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추구
 - 미 본토를 목표로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공포의 균형'이 아닌 한반도, 일본, 괌 등을 대상으로 핵 타격 능력을 실전 확보함으 로써 미국과 핵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

- 이를 위해 북한은 핵능력을 제도; 핵 선제 사용을 포함한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법제화했고, 실제 상황에서 재래전과 핵전을 혼합 운용할 수 있는 독트린을 통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며, 미사일 발사를 통해 역내 타격 능력을 현시

5. 북한 군사전략의 한계

-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할수록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
 - 한미연합훈련이 정상화되어 최첨단 미 전략자산이 수시로 전개
 - 대북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이 독자 제재를 추가하고, 사이버 해킹과 같은 분야에 대한 협력이 오히려 강화
- 북한의 공격적 군사전략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
 - 2022년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국 의 안보협력이 본격화
 - 2022년 11월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핵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한반도의 완전한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대북 군사적 억제를 실제 강화하는 조치로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 특히 마지막 조치의 경우,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을 넘어서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에 실시간 공동 대응하기 위

한 첫 수순으로 기능

- 한미일이 협력할수록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강화되어 북한 이 워하는 목적을 달성 난항
-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로 북핵 효용성 감소
 - 미국이 추구하는 통합억제는 인도·태평양을 단일전구로 상정하고 대서양 나토 동맹국과 인태지역 동맹국을 연계(federation) 하여 최대치의 자산을 활용한 승수효과 구축
 - 북한 위협 증가는 미국이 통합억제를 통한 안보 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추동력으로 작용
 - 북한 핵에 대한 "맞춤형 억제 능력"은 핵 자체를 무력화할 수 준까지 발전 가능
 - 중국이 미국에 맞서 군비를 증강하더라도 동맹 자산을 활용하는 통합억제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므로 일정 수준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 불가, 이 경우 중국의 무조건적 대북 지지는 철회

^{제1세션} 경제

발표

북한 경제 분야 평가 및 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애(길림대 교수)



제1세션: 경제분야_발표

북한경제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1. 들어가며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 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전원회의 결정서를 채택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올해 1월 1일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식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2023년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

그런데 경제 분야의 경우, 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근래에 보기 드물게 분량이 적다는 점이 눈에 띈다.1) 내용도 종전보다 빈약하 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많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물론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 자체가 종전보다 상당 정도 감소²⁾ 한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아울러 이번 전원회의는 종전과는 달리 국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보다 대외 대남분야, 특히 군사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분 야는 성과도 없고, 대안도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할 말이 없었

^{1) 2021}년 말 전원회의 경제 분야 보도가 A4 용지 기준으로 경제 일반 3페이지, 새로 운 농촌강령 5페이지 등 총 8페이지 정도였다. 새로운 농촌강령을 제외한 경제 일반 의 보도만 놓고 비교해 보아도 전년의 3페이지에서 이번에는 1.5페이지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²⁾ 전년에는 200자 원고지 기준 100.8매였으나 이번에는 69.3매로 대략 30% 정도 감소했다.

을 것"이라는 평가를 그저 농담으로 치부해 버리기 어려운 상황, 즉 그 만큼 북한경제가 어렵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의기간이 사상 최장기간인 6일이었다는 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보도된 내용 정도였을 리가 만무하다. 분명히 논의 자체는 많았고,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한 지시도 많았고, 결정서에도 많은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도, 즉 공개 내용을 예년보다 크게 축소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말의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 내용을 가지고 북한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상을 전망하는 작업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보도 내용보다 외연을 훨씬 넓혀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2년의 북한경제 상황을 정리, 평가하고 2023년에 대한 간단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 글은 올 1월 1일 공식매체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지난해의 실적과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 평가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다만 전원회의 결정서의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일부만 공개된 상태에서 정리,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 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사전에 밝혀둔다.

2. 2022년 북한경제 평가

가. 2022년 북한경제 실적에 관한 전원회의 보도 주요 내용 및 평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첫 번째 의정(의제)으로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하여,가 상정되 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토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한 공식 매체 보도 내용 중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관련 부분은 이번 장(제2장)에서, '2023년도 사업계획'관련 부분은 다음 장(제3장)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2022년 실적 평가 부분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 건설분야를 꼽았다. 그는 "건설분야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화성지구와 련포지구 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대상들이 준공"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떼고 전국의 시, 군들에 농촌발전의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 살림집들이 일떠섰"다고 밝혔다. 그가 경제분야의 또 다른 성과로 내세운 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국가적인위기대응 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번 전원회의 보도는 전년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년의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2021년에 대해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종합 평가했다. 동시에 2021년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서 경제 여러 부문의 성과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위원장은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했다"는 정도의 평가를 내놓았다. 아울러 성과를 제시한 부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전년의 전원회의에서 가장 성과가 많은 부문으로 내세운 것이 농업 부문이었고, 이어 건설 부문이었다. 농업에 대해서는 "당이 제일 중시 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였다"고 밝혔다. 건설의 경우, 구체적으로 송신, 송화 지구의 1만 세대 건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 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 건설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전력, 석탄공업부문, 건재공업부문과 기계, 채취, 림업, 륙해운, 철도운수부문을 거론했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2년 경제분야 성과는 건설 부문이 유일무이한 성과였다고 밝힌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화성지구와 련포지구의 건설,3) 농촌의 본보기 살림집4)을 거론한 정도에 그쳤다.5) 또한 전년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내세웠던 농업은 이번에 그성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아울러 중화학공업이든 경공업이든 산업부문 또한 그 성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경제 전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난 이후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주택 건설이외에는 거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전년에는 자력갱생의 성과를 강조했다. 즉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 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 리고 이런 성과를 가져온 최대 원인으로서 주민들의 충성과 애국을 지

³⁾ 화성지구의 살림집, 련포(연포)지구의 온실농장, 살림집, 편의시설 건설

⁴⁾ 농촌 살림집 건설은 도시의 초고층 살림집 건설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나 건설자재 조달 측면에서 용이하며, 대북제재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는다. 더욱이 지방의 자력 갱생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도 적다. 다른 경제적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울러 주민들의 의식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북한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사업이고, 더욱이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2023.1.2., p. 8.

⁵⁾ 다만 건설에서도 토목 분야 건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의 성과 가 부진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적했다. "전체 인민이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려는 충성의 열의를 안고 산악같이 들고 일어나 모든 곤난을 인내하며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톤이 적지 않게 바뀌었다. 물론 2022 년에 이루어낸 성과들이 주민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 덕분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원론적인 색채가 강한 긍정적 평가였고, 더욱이 강한 질책도 많았다. 김 위원장은 "자립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경향이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군들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책"했다. 즉 경제난 타개의핵심 수단으로 자력갱생 기조 하의 과학기술 발전을 목소리 높여 외쳤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그원인으로 사상의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일군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다.

나. 2022년 북한경제 평가

1) 재정

2022년 북한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공식 지표의 하나가 재정 통계이다. 김정은 시대에 국가 예산수입은 2013년부터 (전년대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해 2020년까지는 매년 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가 2021년과 2022년에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계획 기준, 〈그림 1〉참조). 국가 예산 지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 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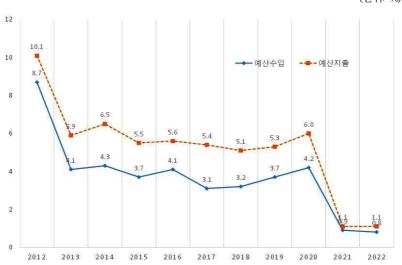
보이고 있다.

2021년에 예산수입과 지출의 증가율이 각각 0.9%와 1.1%로 책정되었고 이어 2022년에도 각각 0.8%와 1.1%로 책정되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게다가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 현재 북한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한정부는 제재 및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예산수입 증대 노력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는 지는 의문이다.

〈그림 1〉 김정은 시대의 예산 수입/지출 계획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 자료, 로동신문, 이종규(2021), 홍민 외(2022).

2) 북중무역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무역은 김정은 시대에 2015년부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7년부터는 고강도 대북제재의 본격회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7년부터는 주로북한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후 2020년부터는 코로나 유입을 막기위한 극단적인 국경봉쇄로 인해 수출 수입 모두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북중무역은 2020년에 북한의 대중수입이 4.91억 달러로 전년대비 81.0%의 감소를 보였고, 북한의 대중수출은 0.48억 달러로 전년대비 77.7%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어 2021년에 북한의 대중수입은 2.61억 달러로 전년대비 46.8%의 감소를 보였고, 북한의 대중수출은 0.58억 달러로 전년대비 26.0%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입은 7.73억 달러로 전년대비 240.5%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고, 북한의 대중수출은 1.16억 달러로 전년대비 173.6%의 증가를 나타냈다(〈표 1〉, 〈그림 2〉참조〉.

그런데 북중교역이 그동안 대폭적인 감소로 규모 자체가 매우 작아 져서 2022년에는 조그마한 규모의 변동에도 증감률 자체는 크게 나타 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2022년 1~11월에 북중무역(8.88억 달러)은 전년대비 231.3%의 매우 큰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증가 규모(금액)는 전년동기(2.68억 달러)보다 6.2억 달러 증가한데 불과하다. 그리고 2022년에 북중교역이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위기 직전의 2019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11월 북중무역 8.88억 달러는 2019년 같은 기간의 25.25억 달러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수입 7.73억 달러도 2019년 같은 기간 23.32억 달러의 1/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그림 2〉참조).

⟨표 1⟩ 2021~22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 월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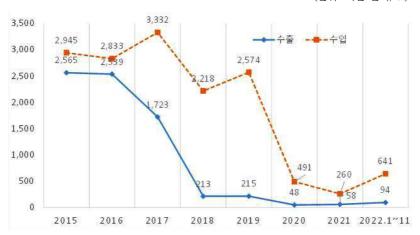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16 6 1, 79
	북한의 대중수입	증감율	북한의 대중수출	증감율	북중수출 입 합계	증감율
2021.1	0.03	-100.0	1.5	-85.6	1.5	-99.2
2021.2	0.003	-100.0	1.8	378.9	1.8	-83.6
2021.3	13.0	-28.0	1.3	112.3	14.3	-23.4
2021.4	28.8	31.9	1.8	-16.3	30.6	27.5
2021.5	2.7	-95.4	0.7	-84.2	3.5	-94.5
2021.6	12.3	-86.0	1.8	-80.1	14.1	-85.4
2021.7	16.8	-74.5	4.1	-48.3	20.9	-71.7
2021.8	22.5	17.0	6.2	-5.0	28.8	11.4
2021.9	55.6	194.6	14.3	637.3	69.9	235.8
2021.10	39.8	15631.2	2.0	42.0	41.8	2418.4
2021.11	34.7	23353.4	6.6	482.4	41.3	3141.9
2021.12	35.0	937.6	15.7	873.3	50.8	914.0
2022.1	57.5	195348.8	17.9	1109.0	75.4	4882.7
2022.2	58.9	1730317.5	2.0	15.1	60.9	3363.6
2022.3	57.1	339.7	3.6	173.2	60.6	324.4
2022.4	98.1	241.2	4.2	129.9	102.3	234.5
2022.5	14.5	434.8	5.8	674.1	20.3	485.4
2022.6	19.3	57.1	2.5	36.5	21.8	54.4
2022.7	59.7	255.5	13.0	214.9	72.7	247.5
2022.8	71.5	217.4	18.8	200.9	90.3	213.8
2022.9	90.1	61.9	14.2	-0.5	104.3	49.2
2022.10	132.4	232.6	21.4	971.3	153.8	267.9
2022.11	113.9	228.2	11.8	78.8	125.7	204.3

자료: 상동

〈그림 2〉 2015~22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 연간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협회

3) 식량 생산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2022년 북한의 식량생산이 전년 대비 3.8%(18만톤) 감소한 451만톤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기운데 쌀은 △4.2%, 옥수수 △1.3%, 서류 △14.0%, 맥류 12.5%, 두류 △5.3%, 잡곡 △21.7%의 생산 증감률을 기록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북한의 식량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서 농업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 지역의 여름작물 생육기간(5~9월)동안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0.4도 낮은 19.7도였고, 강수량은 1,066.1㎜로 작년보다 327.1㎜ 많았고, 일사량은 2,774.9MJ로 작년보다 114.2MJ 적었다.

어느 북한 농업전문가?)는 전년 대비 3.8% 감소에도 불구하고, 450

⁶⁾ 농촌진흥청. "'2022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보도자료)," 2022.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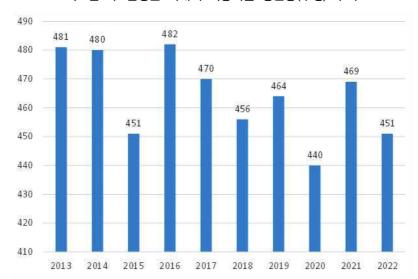
만 톤을 상회하는 식량생산 실적을 기록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는 선 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그림 3〉에도 나타나 있듯이 농촌진흥청의 추정에 따르면, 451만 톤은 김정은 시대 들어 최저 생산량은 아니다. 코로나 위기 첫해인 2020년의 440만 톤이 최저생산량인데 작년의 451만 톤은이보다 11만 톤이 많고, 2018년(455만 톤)보다는 4만 톤 적으며, 2015년(451만 톤)과 같은 수준이다.

2022년 초반만 하더라도 2022년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었던 데다 화학비료 수입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 발생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를 봉합했고, 중요한 농작업들이 큰 지연 없이 추진되었다.

비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화학비료 수입이 2022년 1~9월 472만 달러에 그쳐 2021년 전체의 2,421만 달러보다 무려 80.5%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비공식적인 비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다 △농장의 퇴비 및 유기질 비료 생산 공급 증가 △수출용 석탄의 내수 공급으로 화학비료 국내생산 증가 △식량작물 생산부문에 화학비료 우선 공급 정책 등의 요인도 작용해 2022년의 비료 공급량은 68.3만톤으로 전년의 75.7만톤보다 9.8%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농촌진흥청은 밝히고 있다.8)

⁷⁾ 김영훈, "코로나 봉쇄시기 북한의 식량수급과 농정변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제 12차 남북에너지협력 전문가 세미나 발표 자료, 2022.12.23.

⁸⁾ 김영훈, "코로나 봉쇄시기 북한의 식량수급과 농정변화."



〈그림 3〉 김정은 시대의 식량작물 생산량(추정) 추이

자료: 한국농촌진흥청,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 보도자료, 각 년도.

4) 산업 생산9)

산업 생산의 경우, 중화학공업은 전년과 큰 변화가 없으나, 경공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생산이 소폭이나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화학공업은 기계설비와 금속류 원자재의 수입 중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속, 화학, 기계 등 기간 산업의 생산활동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못하는 가운데 생산활동이 전년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경공업의 생산은 전년보다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⁹⁾ 산업생산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이석기, "2022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3년 전망," 통일부·KDI 주최 2022년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발표자료, 2022.12.19. 에 의존하고 있다.

보인다. 북중무역의 증가로 화학, 섬유, 식품 등의 분야에서 원부자재수입이 증가하면서 경공업 공장의 가동이 약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 1~10월 중에 플라스틱류의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46% 증가한 8,660만 달러를 나타냈고, 섬유류는 408% 증가한 4,800만 달러를, 콩기름은 482% 증가한 3,450만 달러를, 당류 및 설탕은 512% 증가한 2,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그리고 당국이 지방 차원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특히 주민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방 당정기관에 전가하는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시·군 발전법, 시·군 건설세멘트 보장법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지방산업공장의 현대화를 독려, 촉진하는 정책도 경공업이 중심인 지방산업공장의 가동을 소폭이나마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상황도 소폭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금지되었던 해수욕이 2022년 8월부터 허용되는 등 국내관광과 휴양에 대한 통제가 상당정도 완화되었다. 또한 또한 2020년 이후 중단되었던 경제분야의 대규모 행사, 즉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전국구두상품회, 전국여성옷전시회2022 등도 재개되었다. 이처럼 8월 이후 국내이동에 대한 통제가 상당 정도 완화됨에 따라, 또한 북중무역증가 등에 따른 경공업 생산 증가에 따라, 상업유통을 비롯해 관광, 음식숙박, 컨벤션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생산활동이 다소 제한적이지만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설업은 북한정부 스스로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혔듯이 지난해 경제 분야에서 생산이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부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5) 2022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지난해 북한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는 크게 보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상반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6월에 열린 제8기 제5차 당 전원회의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2022년도분 계획의 상반기실적을 결산 및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모두 4개의 의정(의제)를 다루었는데 두 번째 의정인「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에 관해서《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과업들을 일부 조정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전원회의에 대한 북한 공식 매체의 보도에서는 당 및 국가 정책과업들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과업들을 조정했다는 사실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2021년 말에, 2022년 한 해 동안의 경제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난해 상반기의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월 중순에 북중간 화물열차 운행을 17개월 만에 재개했으나 아직 전면적 재개가 아니라 부분적 재개에 머물러 필요로 하는 중간재와 소비재를 충분히 수입하지 못한데다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 자의 발생·확산으로 다시 국경출입과 국내이동을 거의 봉쇄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다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 하반기 및 연간 목표를 하향조정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2년 5월 12일에 느닷없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며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면서 지역별 봉쇄와 단위별 격폐를 더욱 철저히 했다. 그러다가 8월 10

일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91일 만에 정상방역체계로 전환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역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정책기조도 다소 완화했다. 이런 맥락에서 9월말에 북중화물열차도 5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북중 간 교역, 특히 북한의 대중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 재와 원자재의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물론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와는 상황이 사뭇 상이하다. 또한 북한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난 2021년보다는 방역보다 경제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기조로 옮겨가면서 북중간 비공식 교역도 다소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내에서도 지역간 이동 통제 등도 다소 완화되면서 경제활동에 약간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

그렇다고 해도 지난 한 해동안 5개년계획의 연간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2년의 5개년계획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경제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부문에 따라 다소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매우 어려웠고, 무역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북한 GDP 추정의 직접적 토대가 되는 각 부문/산업별생산의 전년 대비 동향을 보면, 식량은 소폭 마이너스, 중화학공업은 불변, 경공업과 서비스업은 소폭의 플러스, 건설은 플러스 등의 방향성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북한경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방역 최우선정책의 완화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쳤

¹⁰⁾ 양문수, "2022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2), pp. 60-62.

던 최대 변수가 이른바 3중고를 구성하는 요소, 즉 대북제재, 코로나, 자연재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에 대북제재는 여전히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연재해의 경우,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중립적인 변수였다. 반면 코로나의 경우, 전 년수준의 부정적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8월부터 방역 완화 정책, 즉 국경봉쇄 완화에 따른 북중무역 증가로 전년보다는 긍정적 영향이 늘어났다.11)

따라서 2022년 북한경제가 2021년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해도 소폭에 그칠 것이며, 이보다는 제로 성장을 했거나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큰 폭의 경기 하강 혹은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했을 가능성은 없다. 당연히 고강도 제재이전, 즉 2016년 이전의 경제상황으로 되돌아갔을 가능성도 없다. 더욱이 아직까지 코로나 발생 이전, 즉 2019년 이전의 경제상황으로 되돌아갔을 가능성도 없다. 설령 2022년에 일시적으로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해도 현재 북한경제가 처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아사로 대표되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¹¹⁾ 방역 완화 정책은 이미 8월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북한의 대중수입은 코로나가 발생한 5, 6월에 국경봉쇄를 다시 강화해 1,500만 달러와 1,90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였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주장한 7월에 국경봉쇄를 다소 완화해 6,00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렸다.

3. 2023년 북한경제 전망

가. 2023년 북한경제 운영 방향에 관한 전원회의 보도 주요 내용 및 평가

우선 2023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김 위원장의 보고를 살펴보자. 그는 2023년 사업의 총적 방향으로서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올해 목표 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 수행에 총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 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 성과 정비보강전략 수행, 인민생활 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 하는 해"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반적 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 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 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는 보고를 통해 올해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 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동시에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 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사업에서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건설 분야, 즉 살림집 건설을 꼽았다. 그는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세 번째 해에 "수도 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2단계 1만 세대 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당이 제

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과업"으로 제기했고, 이런 맥락에서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하였다. 건설 부문에 이어 농업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한 "경공업과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제시한 올해 경제운영방향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발생했을 뿐, 종전과 큰 변화가 없으며, 2년 전에 제시한 5개년계획의 수행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목표 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 제 수행에 총매진",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 수행",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12)등의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올해 계획 수립에서 핵심 분야의 현물 생산 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정비보강을 중점 추진한다고 해도 핵심 분야의 물적 생산 목표 달성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정책 방향일 수도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5일, "5개년 계획의 목표"라는 기사를 게재해, "당 제8차 대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말에 가서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40%)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30%) 이상 장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이 오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를 2020년 대비 40% 증가시키려면 2021년부터 5년 연속 매년 7%씩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 5개년전략을 수립하면서 매년 8%씩 성장한다는 야심찬 목

¹²⁾ 밑줄은 강조를 위해 필자가 표시한 것

표를 내세웠으나 결국 목표에 크게 미달하면서 경제일군들을 강하게 질책했던 경험을 연상케 한다.

올해의 사업방향 제시와 관련, 눈에 띄는 것의 하나는 방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김 위원장은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여러 차례 지적,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지난해 8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정상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국경봉쇄 및 국내이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로나 유입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푼 것은 아니었고, 더욱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행한 것도 아니었다. 전원회의 기간 동안에 방역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누락되었다.

아울러 올해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간 산업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런데 노동신문 지난해 12월 27일자는 전원회의 첫날의 동향에 대해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2022년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금속, 화학, 석탄, 기계 등 기간 공업과 건설, 농업, 경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2023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들과 실행방도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일자에 전원회의 결과 전체에 대해 보도할 때는 지난해 실적과 올해사업방향에서 기간 산업은 누락시킨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전원회의 보도는 지난해 실적과 올해 사업방향에 대한 김 위 원장의 언급은 살림집을 포함한 건설, 농업, 경 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문 등 인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부문으로 국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기간산업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인지 김위원장 자신이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은 직 접 챙기는 애민적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번 보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올해 자신이 앞에서 제기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 다음의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사상투쟁, 대중운동이다. 그는 앞에서 밝혔듯이 자립, 자력의 사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객관적 환경의 탓만 하는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강력히 비판, 질책했다. 그러면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다시 한번 1960년대, 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 나갈 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했다. 아울러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대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이다. 그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 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했 다. 동시에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수단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 기술에서 객관적 조건보다 주체적 요인, 특히 사상을 중시하고 이를 강조하는 정책기조는 김일성 시대에 자주 나타났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더욱이 천리마운동, 속도전 등과 같이 1960, 70년대 성행했던 대중운동은 1980년대 이후로는 뜸해지면서 간헐적으로만 등장했을 따름이었다. 대중운동이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지나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것은, 특히 정치사회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 효과는 없다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소환해 강조한다는 것은, 달리 보면 그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과거회귀적, 퇴행적 태도이다.

과학기술 발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로 이름붙여 강하게 질타했듯이 개도국이 자력갱생의 모토하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북한 지도부가 그것을 모를 리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이를 다시금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23년 북한경제 전망

앞에서 보았듯이 올해의 북한경제를 전망할 때 올해 사업방향을 밝힌 당전원회의 보도 내용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올해 실시할 정책의 일부만 보도한 탓도 있지만, 현재 공개된 것만 놓고 보면 올해 경제 정책이 종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데다, 북한의 국내 경제적 요인은 올해 북한경제의 상황을 결정하는 데 무시못할 요인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아울러 북한의 표현을 빌리면 주체적 요인보다는 객관적 조건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올해는 최근 몇년간이 그러했듯이 경제외적인 요인, 북한 외부의 요인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이다. 북한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와의 교류 확대에 따른 변종의 유입으로 지난해 5~6월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방역최우선정책을 완화했으며, 이는 앞으로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지되거나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북중교역은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해 경공업, 서비스업 등북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상황이 크게호전된다고 하면, 코로나 위기로 중단되었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의 북한 관광이 재개되어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행하면서 코로나 확진 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증가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중 양국 모두 북중 국경봉쇄 문제에 대해 또다시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마도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과거 3년간 그러했던 것처럼 국경봉쇄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방역보다 경제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보여주었던 극단적인 국경봉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북중 국경봉쇄 완화 시점 및 완화 수준에, 따라서 올해 북중무역 및 북한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둘째, 대북 제재 상황이다. 현재의 북미 양측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2023년에 북미 핵협상이 재개, 진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올 해중에 현재의 대북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중국, 러시아의 대북지원 및 북중 및 북러 교역·경협의 규모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최대의 통로이자, 거의 유일한 통로이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현재의 국제관계구도를 신냉전, 다극화로 규정하고 한미일-북중러 진영화 추세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 중국, 러시아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제재 효과의 완화 및 상쇄, 나아가 제재 무력화에 노력해 왔고, 올해도 이런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높다. 물론 북한이 그런 노력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획득하고 또한 북중 및 북러 교역·경협이 어느 정도 진전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북한 및 중국의 코로나 상황, 미

중 전략적 경쟁 및 미러 갈등의 전개양상 등과 같이 많은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23년에,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경기하강 혹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당장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2022년처럼 큰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소폭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규철·박형중·신영전·양문수·임수호·최지영, "북한의 사회 경제 현실과 분석: 다양한 논점,"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9월호.
- 김영훈, "코로나 봉쇄시기 북한의 식량수급과 농정변화," 에너지경제연 구원 주최 제12차 남북 에너지협력 전문가 세미나 발표 자료, 2022.12.23.
- 농촌진흥청, "'2022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보도자료)," 2022.12.15.
- 양문수, "2022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역음,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마산: 경남 대학교 출판부, 2022).
- 이석기, "2022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3년 전망," 통일부·KDI 주최 2022년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발표자료, 2022.12.19.
- 이종규, "북한의 재정충격, 경제적 영향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1 년 1월호.
- 이해정, "2023년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경제·사회 부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2023.1.2.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2023.1.2.
- 홍민 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분석," 통일연구원 현안분석- 온라인시리즈, 2022.2.

『로동신문』, 2023.1.1.



제1세션: 경제분야_토론 ❶

토론문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경제분야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총론적 전망

-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무력 고도화 정 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 기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것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기 정사실화하고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
 - 내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 동원에 의존한 생산, 정비보강 (생산공정이나 시설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사업체계 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 주민생활 개선 목적 달성 불가피.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복원, 과학기술의 역할과 국가위기대응능력 강화, 애국심, 정신력, 사상전, 절약에 집중
- 북한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제재, 봉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 병 등 외부적 영향에도 지속가능한 자립경제구조를 완비하는 것이 라는 점 주목. 자력갱생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잠정적인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라는 점을 의미

- 당장의 민생 개선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먹는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면서도 미래세대, 후세대 복지와 번영에 초점 을 맞춘 중장기 전망사업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 로 예측

2. 분야별 평가와 전망

-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 목표치나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는 8차 당대회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7차회의 김정은의 시정연설 등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반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노동신문(2022.10.5.)은 '5개년계획의 목표' 기사에서 "당 제8 차 대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말에 가서 2020년 수준보 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40%)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 배(30%) 이상 장성"하는 것이라고 강조
 - 5개년계획이 완수되면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연계, 자립적 토대가 정비보강되어 경제 전반이 성장궤도에 올라서게되며 식의주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이 북한 측 주장.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5개년계획 완수를 위한 정비보강전략 실행에 집중한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재강조
-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북한은 올해 다수의 예측과는 달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투입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집중할 전망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는 올해", "당중앙은 올해 사업의 총적방향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을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으로 확정"(『로동신문』, 2023.1.5.)했다고 주장
-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 적 담보를 구축하고, 정비보강계획을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시된 5개년계획, 정비보강계획의 내용과 방대한 과제를 고려해볼 때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 이는 올해 북한이 국가방위력 건설에 나서면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그 어느 때보다 총력집중할 것임을 시사. 특히지난해 농기계와 같은 군수공업부문에서의 민수분야 생산지원이 확대될 전망

○ 인민대중제일주의 성과 창출에 주력

-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속적으로 애민정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 이는 단기적으로는 인민생활 향상을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평양 1만세대 살림집 추가 건설, 농촌건설, 관개건설, 간석지 개간, 경공업, 지방공 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분 등이 대표적인 민생개선 분

- 야. 지난해에 이어 밀과 쌀 중심의 알곡 생산 구조 변화, 경공 업제품 질제고를 통해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 해결 등의 과 제가 올해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
- 북한은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살림집 건설 성과를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 또한 먹는 문제 해결에도 사활을 걸 것으로 판단. 북한은 올해 미국의 제재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먹는 문제 해결과 살림집 건설, 생필품 공급으로 민심을 관리하려는 의도
 - * 김정은은 지난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 연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위한 경제 과업을 제시하며 '식량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 '식량 문제'를 '인민소비품 문제'와 함께 "인민 생활 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이자 "급선무"이고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고 강조. "농사만 잘되면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무서울것이 없다"라며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로동신문』, 2022.12.2.)
- 식량문제를 비롯한 농촌문제 해결을 비롯해 올해 들어 양곡, 의약품 유통 비리 척결 등 사회 법질서를 강화. 먹거리 확보 문제에 있어 전 국가적인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농업 부문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 2022년 10월 6일 채택한 수매법 주목. "수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매품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사명"이라고 설명. 수확 이후 각 지역에서 이를 집계, 유통하는데 있어서 국가 주도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

-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정면돌파'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중, 대리 무역 확대를 5개년계획 완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올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완화 정책의 추이와 결과를 지켜보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 중국과 의 교역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와의 교역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
- 미래세대, 후세대 번영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전망사업 적극 추진
 -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의 시정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망적인 중장 기적인 사업들이 설계, 추진되고 있다"며 "경제발전과 인민생 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작 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나가야"한다고 언급
 - 노동신문은 현재 경제건설의 특징으로 "오늘보다도 래일을 더 중시하고 만년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넣은 것"(『로동 신문』, 2022.12.24.)이라고 강조
 - 군사나 경제건설위주의 일면적인 발전전략이나 남에게 의존하는 발전방식은 설사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미래가 없다는 인식.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체의 힘으로 다방면적인 국력을 건설하여야 국가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
 - 이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발전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과 제를 구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 이런 맥락에서 대규모 온실농장, 동서해연결 운하건설(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

동서 해안건설, 핵동력공업 창설 구상(8차 당대회 총화보고 내용) 등의 진전 여부 주목 필요

제1세션: 경제분야 토론 ❷

토론문 북한경제 평가와 전망(2022-2023) 비공식 번역문*

박영애(길림대 교수)

양 교수님은 북한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내용과 중국 세관, 한국 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2022년 북한 재정(매우 어려움), 북-중 무역(증가). 식량 생산(소폭 마이너스 성장). 기타 산업 생산(중화공업 불변, 경공업과 서비스업 소폭 성장, 건설업 성장)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 8기 5차 전원회의를 시점으로 2022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 눠 종합 평가했다. 특히 북한 코로나-19 발생. 최대 비상방역체계 가 동, 지역 및 단위별 봉쇄, 방역 성공 선언, 정상 방역체계 진입, 방역 우선 정책 기조 완화, 경제건설과 방역을 고려하면, 일련의 정책들이 2022년 후 수개월 경제 활동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2022년도 북한 경제는 커다란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작다. 만일 마이너스 성장이 라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일 것이고. 제로성장 혹은 소폭 성장의 가능 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2021년에 비해 2022년 에는 간헐적이지만 중국, 러시아와의 수출입 무역이 시작되고 일부 외 부 자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견해와 결론에 비교적 동의합 니다. 2022년 북한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양 교수님의 분석은 데이터 가 상세하고 정교하여 본인이 몇 번이나 정독해 큰 도움이 됐다. 대북

^{*} 임의 번역한 비공식 번역문입니다.

제재, 코로나-19의 장기화, 한반도 정세의 악화 등 '다변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국제정치 정세와 흐름' 속에서 제로 성장, 플러스 성장,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고, 진정으로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대외경제 무역활동을 전개하며, 정부의 경제통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2022년이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5개년 계획 (2021~2025년)의 두 번째 해인 만큼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경제건설 방침을 둘러싸고 화공·전력·석탄·기계 및 교통운수·건자재· 관광 등 선행 부문과, 농업·경공업·수산 등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 된 기초 부문을 중심으로 인민들의 의식주 등 민생 분야의 중대한 돌 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2022년 북 한 경제는 첫째, 실천적 측면에서 경제건설의 상징적 또는 가시적 성과 는 건축 특히 주택건설 분야. 특히 평양 화성지구와 연포지구 건설. 즉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제정한 계획의 목표로 매년 평양에 1 만 가구를 새로 짓고 2025년까지 5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2022년 2월 12일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을 갖고 이 지역을 북한 '사회주의 문명의 중심'으로 건설할 것이라 했고. 4월 11일 평양 5만 세대 건설계획 1단계 사업인 송화거리 1만 세대 건설 공사를 완공해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 의 기념비'로 명명했다. 평양 보통강안 다락식 주택구가 4월 13일 완 공돼 800세대의 전 주택이 각 분야 '유공자'를 포상하는 데 쓰였다. 그 밖에도 전국 시·군별로 군집화된 '농촌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모델하우스'를 강조했다. 이는 '건국 이래 대동란의 준엄한 격랑 속에

서 인민들의 주택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제효과도 추구하지 않고, 평양시민 의 주거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워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경제체제에 있어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작업' 에 적극 나서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내각의 집권능력을 강화한 것은 분명하다. 노동당 8차 당대회는 7차 당대회이래 경제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경제분야의 총체적 방향 을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를 잘 잡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의 집행은 내각 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전제로 '국가경제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경 제관리방식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정치적 방법, 경제기술적 방법, 행 정조직적 방법을 결합한' 우리식 방법에 의존해 원재료의 국산화와 생 산을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대외경제 무역관계에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무역 협력을 개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대외 경제활동 촉 진은 자립경제의 근간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잠재력"이기 때문이다. 북 한은 2021년 3월 중순 〈수입물자소독법〉을 제정해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코로나-19 하에서도 국경을 열어 대외교역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초 북-중 국제열차 운행을 재개해 북-중 수출입 무역을 촉진하고 있으 며, 각종 정보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3년 북한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8기 6차 전원회의는 2023년을 '5개년 계획 실현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세 번째 해'로 규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발전 노정과 공화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로되는 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해',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 '국가경제발전의 큰 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 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했다. 이러한 표현은 비교적 공허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는 외부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양 교수님도전염병발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중국의 대북 지원, 북-중 경제무역 협력, 북한 내 상황 등 네 가지 관점에서 2023년 북한 경제를 전망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분명히 2023년에도 북한의 미래와 북한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적 요인들이다. 본인은 2023년에도 북한은 총체적으로 지난 2년간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첫째, 건설업, 특히 주택건설, 농촌건설, 농업발전, 경공업과 지방공

첫째, 건설업, 특히 주택건설, 농촌건설, 농업발전, 경공업과 지방공업, 서비스업, 수산업은 '인민경제 각 부문이 실현하려는 경제지표와 12개 중요 고지'가 될 것이며, 화학·전력·석탄·기계·교통·건자재 건설업 등 주요 경제부문과 미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교육·과학기술 등의 부문이 될 것이다.

둘째, '고지를 점령하는 방안'은 자력갱생,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 대중운동 등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진력' 외에 때와 장소에 따라 '경제관리 개선', '과학기술자립'(기술신비주의·대외기술의존 청산)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의 조정, 계획과 시장과의 관계 등 두 가지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 아래 이용가능한 시장을 견지해야 한다"거나 "시장을 이용해도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시장은 국가배급체계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북한 정부는 가격통제, 거래대상, 사람의 이동, 시장 규모 및 장소의 제한 등의 통제 조치를 통해시장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지만, 시장은 한편으로는 그 제약을 돌파하거나 우회하는 다양한 실천 과정에서 견고한 자기 재생산 수단을 창출

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의 결합,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구조변수 간의 상호작용, 상호영향 등 내부 매커니즘에 의해 일종의 '역량'을 형성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 계획경제시스템의 나선형 발전을 고착시켰다.

셋째, 북-중 전염병 예방 정책의 전환과 수렴은 2023년까지 대외 경제 활동, 특히 대중-러시아 경제무역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중 전염병 예방 정책의 수렴은 2023년 북-중 경제 무역 협력의 시작과 확장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북-중 양국은 2022년 전염병 예방 정책 전환을 달성하고 통제를 완화하며 바이러스와 장기적인 공존의 길(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것이다. 양국 국민, 특히 중국 민중들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있으며 점차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이러스와 장기간 공존하는 상태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는 북-중 인문교류, 국경을 넘는 관광업의 발전, 기타 산업 협력에 정책적 보장과 민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장차 대외경제무역 협력,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 발전시켜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북·중·러 양자 및 3자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당의 존엄성 수호, 국제적 지위 향상, 국익 수호를 사명으로 삼고 자주를 원칙으로 함'을 내세워 '전면적 대외관계 확대 발전',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확대 발전'에 주력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 고집하는 '총력 경제발전' 정책을 버리는 것은 북한 의 경제발전 전략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중국-몽골-러시아 경제 회랑을 북한과 한반도로 확장하고 교통 인프라의 상호 연결을 강화하며 산업 협력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하고 북한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공급망과 산업 체인에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관광·교육·문화·보건·과학기술·친환경·생태·민생 분야로 국경을 넘나드는 북·중 간 협력

이 재개될 전망이다.

여섯째,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데 대한 중대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공간을 제한할 수 있다. '압도적 군사력' 증강은 "우리(북한)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다른 것",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기본중심방향으로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 "전쟁동원준비와실전능력제고",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 "핵억제력과 핵공격" 등은 한정된 경제발전자원을 필연적으로 점유하게 되고, 북한의 경제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총체적으로 보면, 2023년을 포함한 향후 몇 년 동안 전염병과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100년만의 대변화가 진행되며, '신냉전'이 심화되고, 열전과 그 확대 가능성이 높아져 한반도 정세가 점점 긴박해지고, 북한 내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경제발전에 매우 불리해지면 북한 경제는 곤경 속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양 교수님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를 바란다.

- 첫째,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구상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북한의 대북 경제정책은 현재로선 탁상공론에 그쳐 그림의 떡이 될 것 같은데, 2023년과 향후 몇 년 동안 남북경협을 기대할 수 있을까?
- 둘째, '2023년 전망'에서 언급한 '미·일·한-중·러·북 간 진영화의 가속 추진 등 변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서방의 진영화 추세가 뚜렷하고 다양한데, 중·러·북 간 진영화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제2세션 **대오**

발표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

이정철(서울대 교수)

토론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웅현(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



제2세션: 대외분야_발표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

이정철(서울대 교수)

1. 북한의 국제·한반도 정세 및 상황 인식 평가

- 북한은 지난해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규정
 - 북한은 지난해 핵보유국 지위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전략국가 지위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
 - * "강대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가진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서고 세계 정치구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조선신보』, 2022.2.23.)
 - * 2017년 11월 29일 ICBM 발사 이후 열린 세포위원장 개막식 (2017.12.21.) 연설에서 김정은이 '전략국가' 개념을 처음 언급 한 이후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개념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

- □ 북한의 이 같은 대외정책을 현상타파적 정책 즉 수정주의 국가 화(revisionist state)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개념적으로는 북한이 2010년대 이후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이래 <u>현상타파적</u> 수정주의화를 추구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0년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북미수교없이는 살 수 있 어도 평화협정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u>안보-안보</u> 교환을 요구하기 시작
 - * 6자회담 시기의 안보-경제 교환 프로그램을 수세적 정국이라고 선언하고 안보-안보 교환 프로그램을 요구해 온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 가능
- □ 2014년 11월 이후 북한은 쌍중단-쌍궤병행을 정책의 중심으로 제기
 - 오마바 정부를 상대로 쌍중단(Suspension for suspension)과 쌍궤병행(Dual Track Approach)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자 4·5차 핵실험을 진행
 -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6차 핵실험, 화성 15호 발사 등의 도발 을 통해 쌍중단 국면에 진입하는 데 성공
- □ 북한의 수정주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안정-불안정 역설(Security-Insecurity Paradox)이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회색지대 갈등(Greyzone Conflicts) 전략을 활용
 - * 연평도 사태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갈등(Greyzone Conflicts) 이었음.
 - 비핵화를 위한 핵실험과 같은 Escalate to deescalate 식 군사 전략 실행
 - 결과적으로 우리 3축체제론과 맞물리면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심화시켜 치킨게임 양상의 대결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 상존

- 6월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적투쟁'이라고 수정하여 '고도의 격 동 태세'로 대한다고 규정한 데 비해,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전 략국가 지위'라는 개념으로 대응
- 미국에 대해서는 '제압에 의한 굴복'이라는 개념을 사용(『조선 신보』, 2022.1.22.)
 - *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 다."(『조선신보』, 2022.2.23.)
- 전략국가는 스스로 정세를 추동하는 능력에 따라 대외적 지위에 서 상승적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확보된 지위를 의미
 - 북한은 2018년 평화 프로세스를 자신들의 전략적 결단에 따른 결과라고 자찬
 - * "2018년에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른 조선의 자주로선과 전략 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 었다."(『조선신보』, 2022.10.8.)
 - 2021년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북 미관계, 북중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장면을 노출하여 전략국가 로서의 이미지를 연출
 - *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김영철 통전부장, 북미관계를 담당하는 리선권 외무상(정치국 후보위원), 북중관계를 담당하는 김성남 국제부장 3인이 같이 회의를 주도하는 장면을 공개
 - * 대남, 대미, 대중 담당자가 동시에 지도부로 등단하여 대남전략 과 대미전략 그리고 대중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는, 즉 한미중 3 국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과시
 - * 지난 연말 전원회의 분과토론에서는 김영철이 사라지고 최선희

가 회의의 중심에 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의도에 관심

-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 패권의 약화를 강조하여 반사적 이 익을 얻기 위한 '다극화'와 '신냉전론-지정학적 요충지론'으로 발전
 - 일차적으로는 미국 단극체제의 '다극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질 서 재편에 대한 기대를 대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에로의 전환이 가속화…"(『조선신보』, 2022.10.20.)
 - * "중국은 국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전보다 더 사회주의의 원칙과 우월성에 대하여 강조 … 30여년전 사회주의 붉은기가 내리워져 혼란에 빠진 로씨야는 … 오만과 전횡에 대한 반격을 …" (『조선신보』, 2022.5.1.)
 -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강조하여 자신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헤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
 - *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시켜 조미대결구도를 바꾸어놓게 되자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중국과 로씨야도 … 조선과의 친선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외교의 초점을 맞추게"(『조선신보』, 2022.10.20.)
 - 북한의 신냉전론이 지정학적 요충지론과 병행되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신냉전론은 미국의 쇠퇴를 강조하는 것이지 과거형양극체제로서의 냉전기 회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지정학적 요충지론에 따르면 하노이 노딜로 북한의 전략적 실패 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북한이 중국을 견인하여 북중 간 전

략적 연대 관계를 회복한 것에 주목하게 됨.

- 실제 북한은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시진핑 주석의 방 북을 포함해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수행하여 북중 전략적 연대를 회복한 것을 치적으로 강조
- 북한은 2019년 6.30 판문점 회담 직전 시 주석의 방북을 이끌 어내어 중국으로부터 3대 불변론을 확보
 - * 북중관계 〈당대 당, 정부대 정부〉의 공고와 발전
 - * 중국 인민의 대북 우의
 - *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의 불변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와 결합된 전략국가론은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자존' 즉 인정투쟁론적 대외 정책화 가능성을 지 니고 있기도 함.
 - 북한은 '궤도가 다른 대외정책'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미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스스로 전쟁 억지를 위해 국방 자위력을 기르고 있음을 강조(『조선신보』, 2022.2.2.)
 -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이다.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자존은 조선의 본태이며 나라의 존립과 전진을 떠밀어주는 동력이다."(『조선신보』, 2022.10.20.)
 - * 2016년 이후 북한이 정권창립기념일인 9.9절을 계기로 핵실험을 지속해 온 것도 국가주의 흐름과 연결하여 해석 가능
 -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론에 따르면 중국의 궤도국가화(orbit state)를 거부하고 제 갈 길을 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보임.
 - * "지금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제할 소리도 못하고 있으나 자기 힘을 키워 자기 힘에 의거하여 하고 싶은 것을 다해낸 조선은 그러지 않다."(『조선신보』, 2022.10.20.)

2. 올해 북한의 대미 행보 전망

- 북한의 대미정책의 기본은 2016년~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 '쌍중다' 투쟁을 재개한다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매 한미군사연습에 상응하는 공세를 통해 사실상 한 미군사연습의 진행 여부를 알리는 태세를 진행하고 있음.
 -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 사'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 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인민군 총참모부, 2022.12.5.)
 -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핵무력정책법안을 통해 참수작전을 개 념적으로 무력화시키고, 10월, 11월 무력시위를 통해 한미군 사연습에 대한 맞대응 기조를 확립
 - 2015~2017년 사이 북한은 미국에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각종 무력 시위를 에스컬레이션 시켜왔음이 드러났음.
 - * 북한은 2015년 12월 12일 남북 회담 결렬 직후 2016년 1월 4 차 핵실험, 9월 5차 핵실험, 2017년 9월 6차 핵실험, 11월 화 성 15형 발사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미 대남 도발을 연속적으로 진행
 - * 2015년 12월 15일 김정은의 핵실험 결정서가 2016년 1월 3 일 실행 명령으로 이어지기까지 과정을 복기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올해 4월 열병식 연설 이후 핵전략을 첫째 사명과 둘째 사명으로 구분하여 제시
 - 북한은 한국의 선제타격과 킬체인 개념에 대한 대응을 명분 으로 선제핵공격 개념을 둘째 사명으로 명기
 - *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

- 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 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전원회의 보고, 2023.1.1.)
- 북한의 이런 조치는 9월 핵무력정책법안에 담겨 있지만, 동법안은 2013년 법안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
- 동시에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고체연료 ICBM 개발과 핵무기 대 량생산이라는 미국을 겨냥하는 군사전략을 제시
 - 북한은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 운운하여 고체연료 ICBM 개발과 이에 탑재할 초대형 핵탄두 개발 강화를 강조 한 것으로 판단
 - *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 싸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전원회의 보고, 2023.1.1.)
 - * 동시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공식화
 - 또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강조하여 보유 중인 핵원료의 탄두화를 강조
 - *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 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 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 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전원회의 보고, 2023.1.1.)
 - 그동안 북한은 5대 국방 과업을 제시하였으나 5가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사실상 금년도 실행해야 할 3

가지 과제를 분명히 함.

- * 이번 전원회의는 연내 실현할 목표로 고체연료 ICBM, (전술)핵 무기 대량생산. 군사정찰위성 발사 3가지를 제시
- * 5대 국방과업은 △극초음속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제고(15,000km)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 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정찰위성 으로 추정되고 있음.
- * 2020년 당대회 당시 제시한 과제는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 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15,000km 사정권 타격 명중률 제 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입, △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핵심과업으로 제시
- 북한은 자신의 독자 무력 증강 노선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를 상정하는 양면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 북한은 대미 협상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
 - * 북한은 화성-17호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집중하면서 '이 중기준'론을 내세워 한-미를 압박해왔음.
 - 중국이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의도에 대한 중국의 관여·관리 의도로 판단
 - '제압에 의한 굴복' 전략은 2015년처럼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국방력 강화라는 제 갈 길을 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북미회담이나 쌍중단을 성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 * 북한은 2015년 하반기 남북미중 협상의 실패 이후인 12월 15

일 김정은의 핵실험 승인, 2016년 1월 3일 핵실험 강행 명령 을 통해 4차 핵실험(2016.1.6.)에 돌입

- 북한의 대미 유화 메시지는 다음의 4가지 상황에서 읽을 수 있음.
 - 북한은 지난해 6월 인사 과정에서 이성권을 통전부장에, 최선 회를 외무상에 임명함으로써 남북관계 흐림, 북미관계 열림 구도를 제시
 - 북한이 중간선거 기간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핵실험에 나서지 않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의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판단
 - *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북한은 바이든의 미 영공 진입 시까지 대기 후 미사일을 발사하여 바이든 자극을 최소화
 - 북한은 화성-17호 발사에서나 초대형방사포 30문 공개 과정에서도 김주애를 대동하여 '방어용'이미지를 강조
 - * 김주애 공개를 후계문제로 해석하기에는 철 이른 느낌이고, 동 시에 백두혈통의 결연한 의지의 과시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것임.
 - * 초대형방사포(KN-25) 30문 실전배치 공개 직후 성주 사드 기 지를 연상시키는 거리를 타격하는 휴련을 전개
 -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을 공식적으로 호명한다면 북한 은 미국과의 쌍중단 협상에 한차례 정도 나설 가능성이 존재
 - *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선거 당시 불량배(thug)라고 부른 이후, 북한의 지도자(leader)라고만 호칭하여 김정은에 대한 공식 호칭이 부재
 - * 백악관의 호칭인 Mr. Kim까지 진전되었으나 아직은 북한의 인 정 요구에 못 미치는 형태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 북한이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하였고 한-미 당국은 3월 연합훈련의 실기동훈련을 강화할 예정으로 당분간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북한의 군사 기술적 필요를 전제로 판단할 때,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저지할 방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을 핑계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를 정당화 할 것으로 예상
 - * 김여정 12.20 담화,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앙탈을 부려봤자 우리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당이 결정한 정찰 위성개발사업에서 드팀이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변들을 곰곰 히 돌이켜보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한 것이 있었는가 를…"
 - *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 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하였다."(전원회 의 보고, 2023.1.1.)
 - 미국 역시 2.29 합의(Leap Day Deal) 파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전에 협상을 시도할 이유는 없을 것임.
 - 따라서 향후 북한은 8월 한미군사훈련 이후, 9월 정권 75주 년 카드를 두고 상반기 협상을 강제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 이 높음.
 - * '제압에 의한 굴복' 전략을 2015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면,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국방력 강화라는 제 갈 길을 가는 방식으로 북미회담을 대하는 시나리오를 전개할 것임.
 - * 미국이 No Red Line policy에 의존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 당

시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바마 대북정책을 'none for none'이라고 비판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고민이 될 것임.

- 결과적으로 올 1년을 길게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최소한도로 인정한다면), 5월~6월 사이 한차례 정도 고위급 대화가 개최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신냉전을 부인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릴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졌고, 1월 블링컨 방중의 향배에 따라 조기 상황 변화도 가능
 -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동맹 우위론에 근거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도 대화를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임.
 - *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북핵 관리를 요청한다면 현재로서는 미국 이 북한과의 대화를 부정하기만은 어려움.
 - 미국은 대북 제재의 한계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태임.
 - 보니 젱킨스 차관의 발언을 미국의 대북 협상론이라고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그 발언의 개념적 전제에 대해서는 고 민이 필요
 - * 젱킨스는 선비핵화론을 견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 군비통제개념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인정론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

〈군비통제 개념의 등장〉

- □ 미국의 보니 젱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발언 의 미를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
 - 현재 남북관계는 군비통제 프레임 안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라는 불편한 진실을 둘러싼 문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일반론적 발언
 - * All option을 동시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군비통제협상을 북한 핵을 인정하는 핵군축론이라고 개념화할 필요는 없음.
 -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발언 역시 군비통제를 핵군축으로 해석해서 협상의 장애물을 조성하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사용
 - *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arms control" and "nuclear disarmament" that have complicated related discussions and proved major obstacles during Trump-era engagement."
 - 향후 협상에서 최종목표(end state)나 검증과 신고(full baseline declaration)를 강조하는 볼턴식 〈포괄적 합의〉와는 다른 의미의 '포괄' 개념이 재등장할 가능성 고조
 - * 담대한 구상에서도 포괄 합의 개념을 엄정화·구체화할 필요 제기
 - * Laying the groundwork <u>by determining an objective</u> w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any potential arms control talks
 - 북한의 비핵화를 경제재로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6자회담 식 포괄합의의 시대는 끝났고, 북한의 무력 시위를 막는 것은 안 보재를 통한 협상임을 미국도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요컨대 북미관계는 파국을 경험해서 협상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유동적 상황이나, 공은 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요구는 〈북미대화 + 통미봉남 + 쌍중단〉임이 분명하다 는 점에서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운 카드가 되었음.
 - 남북관계의 경우 대통령의 주적론, 선제타격론, 원점타격론에 대한 모종의 수정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통미봉남식 접근을 버리지는 않을 것임.



제2세션: 대외분야_토론 ❶

토론문 북한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미·중 간 3대 Hotspots와 한반도 안보딜레마

지난해 10월 12일 미국은 국방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탈냉전기의 종결과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함과 동시에 중국을 유일한 경쟁 대상이자 최대 위협 국가로 규정했다. 이어서 10월 27일 발간된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보고서도 중국을 "기존의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의지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과 기술력 등을 모두유일하게 갖춘 나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협(multi-domain threat)'가하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정에서 3대 핫 스폿은 남중국해문제, 대만해 협문제, 북핵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핵심문제 중에서 북한 핵문제는 이미 그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앞의 두 문제에 뒤처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현상을 타파하려는 세력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 간 고도의 신경전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결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미중의 전략적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고 군비 경쟁 시대가 재 도래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최저 이다. 더욱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비핵화의 딜레마로 인해 한 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도입 및 신형 전략자산의 배치 같은 민감한 논의가 대두되어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충돌이 예상되다.

2. 한반도 주변의 중국·북한·한국의 3자 역학관계

가. 중국의 입장

시진핑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하여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한을 지지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사회주의 중국과 북한은 양국이 공산정권 수립과정과 항미원조 전쟁에서 협력하고 피를나는 형제국으로써의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비호하는 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미중갈등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한반도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외부 안보 위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 관심(reasonable security concerns)'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각자의 방향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 행동을 내놓거나 반대로 한반도 문제를 지연 전략의 카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며 북한과 기본적 정치적 신뢰를 쌓을 것을 촉구1)하면서 미북 간 대화를 강조하였다.

¹⁾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장관)의 2022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5차 회의 기자회 견 내용. "(两会受权发布)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 记者提问,"『新华网』, 2022.3.8.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을 바탕으로 북한 과의 관계를 최고도로 유지(완충지대화)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조건은 한반도 통일 과정이 평화적이고 외세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지지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전쟁이나 내전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만약 전쟁 발생 시 중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²⁾ 중국에서도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국가가 탄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중국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다.³⁾ 이러한 중국의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은 대 한반도정책에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및 미래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문제의 궁극적 해결 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지 속되는 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등한시 못할 것 이다.

²⁾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 A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0*, 2022.10.26. 참고

³⁾ 중국군 전략연구자 왕성(王翔)은 2014년 '제등계획-한반도전략《提灯计划──朝鲜华岛战略〉'을 통해 한반도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번영·민주·비핵·대중국 우호적인 한반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이 중국에 유리한지 아닌지 6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의 속셈은 ①중국은 통일된 한반도와 구속력 있고 높은 수준의 영구평화협정 체결, ②중국은 통일된 한반도와 모든 미해결 영토와 영해분쟁을 해결하여 미래의 불안요소 제거, ③한반도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 ④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 ⑤중국은 한반도 재건사업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⑥미국이 보증하는 중미협정과 중미한 3자 협정 체결 등 6개 조건이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전제조건이자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목표이며,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확장억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북압박 수단이다. 4)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이 '미북수교'라고 할 때 중국은 미북수교가 이루어지면 완충지대로써 북한을 상실하는 결과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미북 수교로 방향을 갑자기 선회를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되므로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나. 북한의 입장

특히 북한의 현재 정세평가가 중요한데 북한은 현 정세를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기 때문에 이를 틈타 '신냉전-다극화론'과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들고 나와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첨예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그레이존 틈새전략을 극대화 하여 핵전력을 점차 고도화시키면서 법제화된 핵교리를 통해실제적으로 핵을 가지고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국가(제1타격능력확보)로 발전하는 것도 북핵무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2017년 전략국가 개념을 상정한 후 북한을 유인하기위한 '안보-경제 교환 프로젝트'는 실패로 판명 났고(6자회담의 실패), 이후 '안보-안보 교환 프로젝트'를 진전시킴으로써 중국이 해법으로 제시했던 '쌍중단'과 '쌍궤병행'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실상 중국의건설적 작용도 의미가 퇴색하였다. 중국이 일관되게 제시하고 주장하는 '쌍궤병진(双轨并进: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

⁴⁾ Park Jae Kyu, "Ex-unification minister casts doubts on China's role in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Korea Times*, December 5, 2022, p. 4.

행 추진)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이전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그리 큰의미가 없다. 더구나 북한의 핵 무력이 점차 고도화되어 핵보유국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결코 등가도 아니고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단순 맞교환 역시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한반도 차원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미중패권 경쟁이 군사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 동시에 안보딜레마(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론 등장)가 부정적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 크다. 문제는 북한이 걱정하는 '합리적 안보우려'인데 이는 북한의 안전 보장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라는 압박은 전략국가의 지위를 선포한 북한 입장선 절대 수용할 수 없는일이고, 정권 따라 바뀌는 한국의 대북정책 일관성도 없어 북 도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도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이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만 받고, 도발해도 중국은 묵인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긴장 고조를 통한 지정학적 게임을 즐기고 있다. 북한은 항상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설정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경제적 외교적 비용만 지불하고 상황의 주도권을 항상 북한에 빼앗기게 되었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오판이 나타난다. 중국은 북한을 유인하기위해서 경제적 '매수방식(경제재 제공)', 즉 돈을 주고 한반도의 안정을사자는 방식(안보재 획득)을 사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대북 매수방식은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북한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 한국의 입장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미중 전략적 대결 심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북한 레토릭(주적론, 선제타격론, 원점타격론, 참수작선론)은 북핵 해결을 위한 합리적 게임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비통 제적 접근'과 '경제지원적 접근' 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 며,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단계적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 의지는 있으 나, 현재 체제생존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핵방패'는 필사적으로 유지하 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방위력의 지속적 강화는 상대국 역시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결과로 인해 오히려 안보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는 자기모순에 직면하는 역결과(안보딜레마)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의핵무력 고도화는 한반도 차원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미중 패권경쟁이 군사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 동시에안보딜레마(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론)가 부정적 상승작용을 일으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고수하고 중국과 북한은 체제보장(CVIG)을 고집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전향적 핵비확산체제 복귀를 수용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실종될 것이다. 북한이 자의든 타의든 핵보유국화 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최악의 안보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바라기 실패에 따라 남한 역시 자위(自衛) 차원의 국방전력증강, 첨단군사장비 도입, 경항모 건조, 핵잠수함 추진, 핵공유, 전술핵 배치 등 군사 이슈들이 가시화하면서 남북 군사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실(Fact)이다.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과 ICBM·SLBM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 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차단하려고 하며, 그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국제군사력 평가 기관에서도 평가하듯이 북한 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

북한이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무리한 강화는 대북 경제제재를 장기화시키고 비효율적 투자(핵실험 비용)를 급증시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국내 역량의 약화(재정의 고갈)를 초래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신념과 정통성의 위기를 불러와 체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의 핵보유 간에 양자택일을 선택한다면 분명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북한의 핵보유로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 붕괴를 선택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보유를 선택함으로써 중국의 편익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는 현실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잠 정과 상궤병행"은 현실성이 없고, 경제와 핵은 등가교환의 문제가 아니 며, 북한의 잠재적 핵보유 국가로 진화한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남북협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제 북핵 문제는 북 한의 안보불안을 고려한 '군비통제적 해결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한 미가 대북정책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중국의 대북 압력 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또한 중국의 대북한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8.6.12. 시진핑 주석의 "국제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①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②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 ③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대북한 3 불변 입장은 북중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토릭이다. 하

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공세적 제재와 위협은 결국 북한 정권의 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동북아 역내 정치 불안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계속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 고도화정책을 고수할 경우한국의 핵무장론과 미군의 전략무기 한반도 재배치 논의 같은 근본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군사적 역량을 오인하거나 전략적 오판을 하게 되는 경우와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핵억지력 우위를 상실할 경우 한국은 핵무장 담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즉, 한국의 핵무장능력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고리로 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고도의 심리전술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4. 우리의 대응: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 발전시키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유지해야 하므로 미중 사이에 한국이 백년대계 자강(自强)의 길로 매진할 명확한 좌표와 대외정책 방향을 정립한 후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이런 좌표와 방향이 없는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어느 한쪽으로 급속하게 경사되거나, 사안에 따라 상대의 압박에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대외정책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에 따라 확실한 우리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른 리밸런싱과 해징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이나 중국을 우리가 선택하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좌표와 정책방향에 따라 그들의 필요(Needs)가 우리에게 리브콜을 보내는 대외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26 -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는 '미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단순히 평화협정이라는 종잇장이 아니 라 재래식 군비통제 등 평화를 담보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5)고 언 급한 것은 전향적 인식전환이라 할 수 있다.

⁵⁾ 권영세, 北김정은에 "도발시 고립과 결핍 심화…대화하자," https://v.daum.net/v/20221117060122393(검색일: 2022.11.18.).



제2세션: 대외분야_토론 ❷

토론문 북한-러시아 관계, 2022-2023년 평가와 전망

이웅현(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

1. 2022년 북-러 관계

가. 러시아의 위기와 북한의 기회

- 2000년 6월 체결된 북한-러시아 조약은 군사적 동맹의 성격을 배제하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분야의 협력이 주 내용임.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희망과 달리 군사협력보다 경제협력을 중시해 왔음. 일시적으로 6자회담에 기대를 걸거나, 북핵 문제 발생 이후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러 관계는 냉전 시대와 달리 이념, 혁명의 연대가 아니라 국가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있음.
- 이러한 관계는 2022년에도 변함이 없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의 장기화로 북-중-러가 연대하면서 '신냉전'의 도래 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이 등장함(초강대국의 대립은 항상 '냉 전'인가?). 북한 역시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심리적 안정감(또는 자기암시)을 도모하는 한편, 3월 이후 빈번하게 러

시아를 지지하는 자세를 표명

- 3월 초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 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반대한 나라는 북한, 시 리아, 에리트레아 3국. (교전국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반대표는 당연. 중국조차 기권)
- 같은 3월 미 재무부는 북한의 군수품 조달기관 '조선련봉총회사' 와 거래한 러시아의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림. '조선련봉총회사'는 이미 2018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어 왔음. 러시아의 세 기업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 조달에 관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미 재무부는 5월 말에도 북한의 고려항공무역회사, 러시아의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 은행을 같은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올림.
-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 서방의 각종 매체들은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분석, 보도함. 러시아 국가수입의 최대기여품목 원유와 가스의 대유럽수출이 제한되면서, 북한이 헐값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크라이나의 '비핵 현실'이 러의 침공 문턱을 낮추었다는 분석 역시 북한의 '핵무장 정당화'의 논리로 사용됨. (4월 8일에도 CNN이 같은 뉘앙스의 보도를 함. 다만 CNN은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 러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3월 11

일 경 공식석상에서 사라지면서 '문책설' 또는 '경질설'이 제기되었지만, 우크라이나의 TSN(Televizonnaya Sluzhba Novostei)는 쇼이구가 중국과 북한을 방문,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Radio Free Europe).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음.

- 4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푸틴을 "헐뜯었다" 며 "노망하 늙은이의 푸수 없는 객기"라고 맹비난.
- 7월 13일 북한은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도네츠크공화국과 루 한스크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승인

나. 동병상련

- 9월 초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북한산 단거리 로켓, 포탄을 수백만 발 매입했다고 보도. 상세는 밝히지 않았지만, 서방의 제재하 러시아의 무기 수입망 타격으로 북한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는 사실인 것으로 보임. 러시아와 북한 모두 국제제재를 위반하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동병상련의 상황으로 점입(漸入)
-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대 러시아 의존도 변화는 알려지지 않음. 2017년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로 북한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원유, 정제유는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 러시 아는 2020년 여름까지 제재의 범위 내에서 정제유를 공급.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 제1국장은 9월 7일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러시아 에너지 자원과 다른 상품 수입을 중단

했다"며 "상품 거래를 재개할 준비가 되면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명

- 9월 30일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의 병합을 선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국가 승인한 북한의 입장이어색해지는 결과가 되었지만, 고립상태를 공유하는 러-북은 더욱 밀착. 10월 7일 김정은은 푸틴의 70세 생일에 축전. "오늘러시아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전과 위협을 짓부수고 국가의 존엄과 근본이익을 굳건히 수호"하는 것은 푸틴의 "탁월한영도력과 강인한 의지" 때문이라고 칭찬. 공동의 적에 대항하고있음을 강조
- 경제교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에 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11월 2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9월의 뉴욕타임스 보도를 재차 확인하는 입장을 발표. 북한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국가에 선적한 것으로 위장한선박에 무기를 적재, 러시아에 제공해 왔다는 의혹 제기. 12월 22일에는 『東京新聞』이 북한이 11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물자를 (라선-하산) 철도로 수송"했다고 보도. "북조선에 의한 러시아에의 무기공여의 구체적 사실이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두 나라가 함께 국제사회의 비판을받고 있는 가운데,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기술
- 2023년 1월 3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 외무차관은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특별작전) 결정과 도네츠크 등의 병합을 유엔 등에서 확고하게 지지" 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면

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과 러시아는 … <u>국제 문제에서 유사한 접근 방식</u>을 보이고 있고 높은 수준의 … <u>상호 이</u>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

2. 북-러 관계 강화의 전환점, 2022년 여름

○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내부적인 통제가 강하고 "비밀이 많은" 나라들의 대외관계를 '큰 그림'에만 의존하면 정책결정의 배경은 가늠할 수 있지만, 정책집행의 프로세스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 2022년 7월 북한은 도네츠크, 루한스크를 주권국가로 승인. 즉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월 24일) 이후 북한은 이 두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를 지렛대로 대리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주러시아 북한대사 신홍철(申紅哲)

- 2020년 2월부터 러시아(카자흐스탄 겸임) 주재 북한대사인 신흥 철은 201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이해 현재 후보위원 직위를 유지.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대사, 외무성 부상을 역임(*통일부 북한인물정보 포털에는 그의 정보가 없음.)
- 2022년 7월 NK NEWS는 신홍철이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의 지 도자들과 만났다면서, 북한이 이 지역 지도자와 접촉한 첫 사례 라고 보도. 돈바스의 상황이 논의되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임.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타파할 돌파구 모색의 일환이었을 것

- 주북한 러시아대사 마쩨고라(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Мацегора)
 - 1955년생(67세),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신. 2014년부터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 코로나19 창궐 시절에도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북-러 관계의 현황과 그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표명해 왔음.
- 7월 18일 마쎄고라는 『이즈베스찌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돈바스 친러공화국들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언급. 신홍철과 이지역 지도자(외상)들과의 만남 이후 진전이 있었을 것. 북한 노동력의 질이 높으며, 이것이 돈바스의 파괴된 인프라와 시설 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표명. 북한의 양국 승인이 결국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지지 표명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독립적인 성향의 북한의 독자적 결정이라면서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 왔다고 칭찬. 러시아와 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결제적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쉽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계는 인정

8월 8일 마쩨고라는 북한대사관과 돈바스 공화국들의 대사관의 협력을 위한 접촉이 진전하고 있다고 주장(『타스통신』)

3. 2023년 북-러 관계 전망

○ [전망 1] 요컨대. 북한과 러시아는 제재를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2022년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은 ① 북한의 대러 (암암리의) 무기 수출, ② 도네츠크와루한스크 등 제3지대를 통한 간접적 경제교역이었음. 그러나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병합을 선언하면서, 이 지역은 '제3지대'의 지위를 더 이상 향유할 수 없게 되었음. 2023년에는 ①의 방법을 지속하면서 ②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모색, 전개할 것으로 보임.

○ [전망 2] 2022년 12월-2023년 1월 『로동신문』이 게재한 "로씨야" 관련기사를 보면 북한이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음. 즉, (2022년)

12월 2일: 코로나비루스 (누적), 러시아 감염자 21,590,828명, 사망자 392,002명. "로씨야에서 최근 급성호흡기비루스감염증가 돌림감기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기사는 물론러시아의 코로나 관련 웹사이트나 기관의 발표 등 관련기사는 거의 매일 게재. 통계기사는 유럽, 러시아, 북아메리카, 미국, 기타의 수서)

12월 3일: "로씨야항공우주군이 11월 28일 ···소유즈-2, 16 운 반로케트를 쏴올렸다."

12월 5일: "로씨야항공우주군이 2일 … 새로운 요격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12월 12일: "로씨아북함대 항공대가 7일 바렌쯔해상공에서 반 잠훈련을 진행."

12월 17일: "로씨야와 이란이 14일 우주산업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12월 19일: "15일 유엔총회에서 로씨야가 제출한 나치즘의 영 웅화와 신나치즘, 인종차별 등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12월 23일: "최근 로씨야외무성이 자멸적인 제대행위에 매여달리는 서방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12월 25일: "중로합동군사연습, 해상련합-2002 시작", "로씨야 외무성 ··· 군군주의화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을 비난하였다." (2023년)

1월 3일: "로씨야의 로스꼬스모스국영회사와 중국국가우주국이 2023년~2027년 협조계획을 체결하였다. 로스꼬스모스국영회사는 … 2022년에 로씨야와 중국이 우주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킨데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도 상방간의 협조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6일: "로씨야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젠꼬가 3일 따스통신 과의 회견에서 일본당국이 … 군국화의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이것은 로씨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 2022년 11월 이전과 2023년 1월 이후의 『로동신문』을 계속 관찰해야 하겠지만, 짧은 기간의 『신문』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u>코로나19 팬데믹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u> 점, 그리고 최근 <u>러시아의 우주산업과 미사일 기술개발에 관심을</u>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등임. 특히 이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용하지 않는 분야라는 점, 후자는 항상 고도의 기밀이 유지되는 분야라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제2세션

발표

최근 북한 대남정책 평가와 2023년 전망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난(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제2세션: 대남분야 발표

최근 북한 대남정책 평가와 2023년 전망*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 기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총 6일간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총비서의 보고에만 3일이 소요되었다. 전원회의와 보고 기간 모두 이례적으로 길었는데,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북한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회의 진행 기간 중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8기 6차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을 수정·보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었다.

반면 2023년에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써 2019년까지 거의 매년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발표해 온관행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2020년에는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으로 신년사를 대신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1월에 개최된 제8

^{*} 이 글은 최용환, "2022년 북한정세 평가와 2023년 전망,"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2), pp. 25-42의 내용과 최용환, "2023년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정치·군사 부문," 『2023년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공동주최 토론 회 자료집, 2023.1.2.)의 내용 가운데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남정책 관련 부문 내용을 재정리 한 것임.

차 당대회 결정으로, 2022년에는 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 결정으로 신년사를 대신하였다. 여기에 이어서 2023년에도 별도의 신년사 없이 제8기 6차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발표함으로써, 신년사를 대신하는 주요 정치행사 결정 발표가 새로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일 동안 진행된 보고와 토론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요약한 보도문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실제보고·토론 내용과 보도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번 전원회의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시사점이 많은 회의였다. 또한 전원회의가 개최되던 26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지역으로 침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원회의가 종료되던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월 1일 각각 3발과 1발의 단거리 발사체 사격을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600mm 초대형방사포를 공개하며, 동 사격이 초대형방사포의 검수사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한국군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원회의 기간을 전후한 군사활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김정은위원장은 이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사거리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남한을 직접 위협하기도 하였다.1)

과거 전원회의 보도가 주로 국내문제에 집중하면서 대외·대남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루었던 반면, 이번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도는 대외부문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대남부문에 많은 양을 할애하였다. 이번 전원회의 보도에서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대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보이야 할 것인 가? 남북관계의 부침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과거 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과거 북한은 정치군사적 긴장을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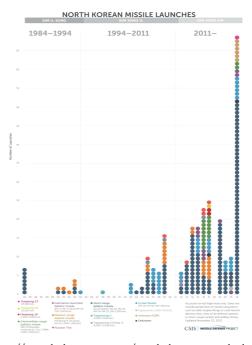
^{1) &}quot;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에서 하신 답례 연설," 『로 동신문』, 2023.1.1.

시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국면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2023 년에도 북한은 이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북한이 군사도발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기조와 최근 발표된 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현실과 쟁점 및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최근 남북관계의 특징과 쟁점

가.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기조

〈그림 1〉 북한 미사일 발사 빈도(2022.12.19. 기준)



자료: CSIS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이 실시한 총 6회의 핵실험 가운데 4번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미사일 시험 횟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빈도는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줄곧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던 북한은 2017년 11월 말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태도 변화로 한 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북미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하노이 결렬 이후 한동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북한이 처음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2019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었다.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결이 어차피 장기성을 띄고 있다며, 자립·자력의 힘으로 제재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한에 대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2)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남북 간 화해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을 주문하였다.하지만, 2019년 연말까지 별다른 상황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북한은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다. 3) 북한의 정면돌파전 은 일종의 양면전략인데, 한편으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2) &}quot;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4.13.

^{3) &}quot;주체혁명위업 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0.1.1.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어 미국의 제재유용론을 무력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미국이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인식시켜주겠다는 것이다. 4) 실제로 이후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했다. 특히 2021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는 다양한 전략·전술 무기 개발을 공언하였으며, 실제 여러 가지 무기체계 시험이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이른바 '이중기준' 논리를 끌고 나왔다. 즉, 한미의 연합훈련이나 첨단 군사장비 도입은 방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군사훈련이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체계 개발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등으로 명명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 역시 정례적이고 일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른바 '강대강, 선대선'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2020년부터는 남한의 한미연합훈련과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거론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급기야 2020년 6월에는 대북전단살포를 명분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으며,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담화보다는 욕설에 가까운 독설을 쏟아내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일차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자,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에 기초하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부차적이었으며, 이는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남한 역할에 대한 실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남측에 의존하는 선임

⁴⁾ 최용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평가와 전망," 『INSS 이슈브리프』, 324 호(2022.1.17.)

자들의 사업방식을 비판한 이후 남북교류는 사실상 단절되었다.5) 물론 그 이전에도 실질적 남북교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처럼 남북교류가 위축된 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남한과의 교류 자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거부감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어쨌든 북한은 제7기 5차 전원회의 이후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정비·보강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과정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이른바 선미후남(先美後南)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 대체로 북한은 대미 비난을 자제하면서, 대남 비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나. 북한의 대외인식과 특징

북한이 이와 같은 대외전략을 추구하는 데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역적·세계적 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모순과 대결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며 패권경쟁 차원에서 국제질서 변화를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이와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은 점차 구체화 되는데, 2021년 9월 시정연설에서는 국제관계를 '신냉전'으로 규정하였다. 7) 2022년 시정연설에서는 국제정세가 미국 주도의

^{5) &}quot;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 신문』, 2019.10.23.

^{6) &}quot;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4.13.

^{7) &}quot;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9.30.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세가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에 훌륭한 조건과 명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8) 즉 북 한은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미러관 계가 악화되는 국제정세 변화를 '신냉전·다극화' 등으로 규정하고, 북 중·북러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2년 북한은 자신들이 2018년 설정했던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나섰지만. 유 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2년 11 월 4일 북한의 ICBM 발사 대응을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이라 며,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였다. 9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의 현실과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중 미러관계 악화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가 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대외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정치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일정 시점에 이르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 을 꾀하곤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인식과 국제관계의 현실을 고려 할 때, 현재 북한은 협상국면으로의 전환보다는 강대국 국제정치를 활 용하여 그 안에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이 맞 다면 현재와 같은 북한의 대외전략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 고, 한반도에서의 강대강 대치국면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북한의 대외전략에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실

^{8) &}quot;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 9.9.

⁹⁾ 김현수, "'北도발 대응'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불투명··· 美 "中-러가 웃음거리 만들어" vs 中-러 "미국 탓"," 『동아일보』, 2022.11.7.

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전략국가'라고 인식하고 그 지위와 국력에 상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0) 또한 2022년 9월 제정한 '핵무력정책법' 서문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 수호의 수단'이라고 규정하였다.11) 이는 양안관계에서 중국이 대만문제를 거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러한 언술에 더하여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중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기도 하였으며,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자제했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태도가 훨씬 공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의 자신감과 함께, 핵무기 사용 위협의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 '선제타격' 발언에 나오자 북한은 김여정12), 박정천13) 등이 연거푸 담화를 발표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특히 김여정은 불과 이틀 후 다시 담화를 발표하여 '전쟁초기 주도권 장악 및 상대방의 전쟁의지 소각 등을 위한 핵공격'을 위협하였다. 14) 이와 같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연설로 재확인되었다. 15) 핵무기 사용에 대한

^{10) &}quot;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방력발전계획," 『조선신보』, 2022.2.2.

^{11) &}quo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2.9.9.

^{12) &}quot;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로동신문』, 2022.4.3.

^{13) &}quot;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 『로동신문』, 2022.4.3.

^{14) &}quot;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로동신문』, 2022.4.5.

^{15) &}quot;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

김여정 담화와 김정은 연설의 언급은 9월 8일 핵무력정책법 채택으로 공식화되었는데, 이 법률에서 북한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나아가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남한 지역 내의 비행장, 항구 및 주요 군사지휘시설을 대상으로 전술핵탄두 탑재 가능한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16) 뿐만 아니라 북한은전방 지역에서 남측과 미국의 포사격 훈련을 명분으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수백 발의 포격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대규모 군용기를 동원한 대응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7)

최근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김여정 등 북한 최고지도부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남측에 의존하는 사업 방식을 비판하거나,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남측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독설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북측 실무부서가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22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총참모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성 등 군부가 주로 대남 담화의주체로 나서면서 대남관계가 '대적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였다. 문제는 최고지도부가 대남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통일전선부등 대남 전문부서의 역할이 실종되면서 정책적 오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2020년 6월에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로동신문』, 2022.4.26.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북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 억제에 있지만, 자신들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북한) 핵무력은 자기의 둘 째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6) &}quot;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10.10.

^{17) &}quot;미국남조선련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진행에 대한 총참모부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2.11.7.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북한 지역에 건설된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폭파시키는 것의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 대남정책 변화 관련 변수들과 북한의 대응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국가들 간의 교류에 장애를 조성하기도 하였지만, 보건의료체계가 허약한 북한 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부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는 대북 방역물품 지원을 제안하였지만 북한은 대북 통지문조차 수령하지 않았다. 18) 심지어 북한은 8월 11일 방역전쟁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번 방역투쟁이 단순히 악성 바이러스와의싸움이 아니라,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초기 발생지가 남측의 전단과 물건들이 날아오는 전방 지역이었다며, 남측이 바이러스를 유입하였다고 지목한 것이다. 19)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 이전에도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물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제안하였을 때, 방역협력·인도주의적 협력·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하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하노이 이후 북한은 이른바 '비본질적 사안'들을 뒤로하고,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 이

¹⁸⁾ 이종윤, "北 16일 의약품 방역 지원 ... '남측 대북통지문 끝내 접수 안 해'," 『파이낸셜 뉴스』, 2022.5.16.

^{19) &}quot;방역대전에서의 고귀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굳게 다지 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의 토론," 『조선중앙통신』, 2022.8.11.

^{20) &}quot;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 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9.

른바 경제-안보 교환 모델을 포기하고, 안보-안보 교환을 지속적으로 요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한국의 대선 이전인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닌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을 표방21)하였지만, 북한이 원하는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에 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단기에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려운 북핵문제의 성격과 과거 여러 번의 협상 실패 등에 따른 피로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2023년 12가지 위기와 11가지 기회요인을 검토하였는데. 이 가운데 한반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특히 기후변화 다음으로 이란 핵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북핵문제를 별도의 이슈로 다루지 않았 다는 점에서 미국 대외정책에서 있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다.22)

2022년 한미의 대선이 있었지만, 북한은 마치 이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2022년 1-2월에만 극초음속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전술유도

²¹⁾ Nandita Bose, "Biden administration sets new North Korea policy of 'practical' diplomacy," *Reuters* (May 1, 2021).

²²⁾ Atlantic Council, "The top 23 risks and opportunities for 2023"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report/risks-opportunities-2023/) (검색일: 2023.1.4.).

탄, 화성-12형 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이어나갔으며, 국가우주개발국 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 개발 관련 중요시험을 실시하였다고 공개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는 봄철 코로나19 발생과 급성 장내성 전염병 발생 등으로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9월 핵무력정책법 제정 이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핵무력 정책법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자의적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었다. 이후 북한은 전술핵 운용 부대의 훈련을 공개하면서 남측에 대한 군사적위협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가. 대외·대남 정책 기조와 단기 전망

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도에서 북한은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 있다며, 기존의 국제정세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에서 대미·대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자신들(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준비'까지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며,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술핵무기 및 핵탄 보유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천명했다. 또한 최단기간 내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를 개발하여 군사위성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23)

- 150 -

결국 북한은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선언하고, 8차 당대 회에서 재확인한 '정면돌파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처한 전략환경, 북한의 대외인식, 핵보유에 기초한 과도한 자신감, 최고지도부의 강경한 대남 정책기조 등이 변화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을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은 자신들이 공언한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다. 그동안 한미의 이른바 '이중기준'을 비난해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군사위성 발사는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과 맞물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개발을 공언한 무기체계 개발이 지속될 것이다.

북한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일지는 알 수 없으나, 2023년을 6.25 전쟁 정전 70주년, '일당백' 구호 제시 60주년, 북한 국가수립 75주년 등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각각의 계기에 해당하는 날 '열병식' 등 군사력 과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반입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군사적 긴장 고조 역시불가피해보인다. 한국 정부 역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시기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와 달리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 기간 중에도 도발에 나서는 등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국지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필요해 보인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23) &}quot;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 통신』, 2023.1.1.

전단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하였고, 남측으로부터 날아 온 물건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고도 지목한 바도 있어, 전단 살포가 이루어질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핵위협에 대응하여 미국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안보딜레마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나. 중장기 전망과 과제

한동안 남북 간의 대치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계기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우선 북한 체제의 취약성에 기인한 문제들이 있다.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 국가이자, 자연재해 취약국가이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스스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향후 점진적으로 국경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의 국경개방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언젠가는 국경을 개방해야 하는데, 주민들의면역력 제고 없는 국경개방은 상당한 위험부담 감수가 불가피하다는점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 정보위원회(NIC)가 선정한 기후변화 취약11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24) 실제로 주기적·반복적으로 자연재해에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인도적 위기 발생 가

²⁴⁾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Responses Increasing Challenges to US National Security Through 2040* (2021).

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기 상황 발생으로 외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북한의 대외전략 기조를 고려할 때 북중관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적 충격이나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위기로 잘 전이되지 않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경제적 위기가 북한 대외·대남 전략의 근본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대외·대남전략 자체의 취약성이 변수가 될 수 있 다. 우선 현재 북한의 대외 대남 전략은 북중관계 의존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른바 '중국 역할론'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의 대 북영향력은 외부의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정책 을 세세하게 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 적이다. 과거 북중관계가 항상 우호적이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북중관계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대외전 략 특징을 고려하면,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북한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 후변화 및 북핵문제' 등이 미중 간 협력이 가능한 대표적인 부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직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 한 혹은 북핵문제에 협력하게 될 경우 북한의 대외 대남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북핵문제를 한미중 공 동의제화 할 수 있는지 여부,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에 대한 지역 차 원의 컨센서스와 공동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한국의 주 요한 대외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협상을 통한 북핵폐기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의 위협수준 저하에 초점을 맞춘 핵군축 논의가 탄력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북한이 협상에 나설 경우 군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25) 아직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핵군축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소수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핵군축 협상에서 한미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논란,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한국의 핵군축 논의 참여 여부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교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국내외 논란에 대한 대비도필요할 것이다.

4. 맺는말

안타깝게도 현재의 긴장된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 적 변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 한 것은 위기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 입장을 고려 할 때, 한국 역시 어느 정도는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겠지만 이것이 안보딜레마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인식과 전략을 고려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 냉전적 갈등구조가 강화되 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 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²⁵⁾ U.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Press Briefing" (October 28, 2022).

또한 어렵지만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도 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황 진전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나 국지충돌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세션: 대남분야_토론 ❶

토론문 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및 전망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평가

- 이번 노동당 중앙위 김정은의 보고내용 평가와 관련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
 - 하노이 노딜 이후 최근 3년간 북한은 신년사 대신 노동당 중 앙위전원회의('20년 및 '22년) 및 노동당대회('21)에서 김정은 보고로 신년사를 갈음.
 - * 북미협상 결렬로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고, 달성가능한 가시적 목표 제시가 불가한 상황에서 집단적 결정을 통해 통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오히려 간부 와 인민들에게 상황에 대한 엄중성을 각인
 - '20년에는 하노이 노딜 다음 해인 만큼 '자력갱생을 통한 정 면돌파'를 내세우며 대미 전략제시에 집중, 대남 메시지 생략
 - '21년 당대회 때는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도입과 한미연합연습 중지등을 요구하면서 우리 당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3년전 봄날로돌아갈 수도 있다고 주장
 - '22년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운 등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우

선순위가 하락하면서 정세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내부문제에 역량을 집중, 대외 및 대남정책 모두 원론적 내용만 공개하면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

- * "다사다난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 적 방향들을 제시"
- 금년에도 신년사 대체라는 형식은 유지, 지난 3년과 비교하여 대남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으나, 메시지는 부정적 내용으로 고착
 - 남한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준비를 공공연히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 천명(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산 포함)
 - 남북관계에 대한 '수요, 기대, 요구가 없는 3무와 대결 및 위 협 일변도'가 특징
- 북한이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을 종종 표출하였지만, 초점은 북미 관계에 있었는데, 신년사를 대신하는 연초 행사에서 김정은의 보 고를 통해 "신냉전의 명백한 전환 및 다극화 흐름의 가속화"를 대미, 대남정책의 기초로 분명히 한 것은 주목할 대목
 - *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 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였다."
 - 이 같은 대남정책 방향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중갈 등, 그것의 동북아 투영과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북한이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임.

- 세계질서 진영화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만큼, 중국, 러시아 및 구 공산권 등 우호국을 통한 고립 탈피, 제제 우회 및 그동안 사실상 핵보유국 굳히기 가능
- * 특히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러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 최근 북한 선박의 불법의심 환적 사례증가, 우크라전 이후 러시아 측 재건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가 가능성에 전망 등 참고
- 남한 정부에 대한 태도는 세계정세의 구조적 영향 하 대북정책의 자율성 축소라는 조건과 대북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거부가 결합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한미일 간 '3각 공조'의 추진 및 현 남한 정부가 국방백서에 '주적' 명기한 것을 빌미로 대남 비난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 연한 전술핵 증강 주장'을 통해 압도적 군사력 강화를 위협
- 결론적으로 과거 미국 및 한국의 대선 등 정세 전환 경과를 보면 서 대미 협상 가능성을 판단하고 남북관계의 활용성 여부를 저 울질하던 것을 끝내고 분명한 정책 방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

2. 전망

○ 세계질서 차원의 구조적 힘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한, '정면돌파'식의 전략 과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그 시간 동안 핵능력 확대를 통한 사실상의 핵국가 지위 확보 추구 및 전술핵 능력 기정사실화를 통해 대남 군사적 우위 과 시 및 위협도 계속
- 당면하여. 3월 한미연합훈련 시 반발과 도발 예상
 - 통상 훈련기간 전후로 무력과시에 나섰는데, 개발추진 중이라 밝혔던 신무기의 과시성 도발도 가능
-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남북 간 접촉 및 대화 가능성은 난망
 - 이미 남한 정부에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선(先) 해결을 요구 했다는 점과 대미관계 개선 중재 등 현 정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판단
- 코로나 등 여건 호전 시 북한의 금강산 자체 개발계획 시행 예상
 -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완전한 제거 등 쟁점 부상 * 개성공단도 우리 측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처리 강행 우려
 - 단, 코로나 이후 신뢰감이 조성된 민간단체의 접촉 및 지원 등은 실수요적 측면과 최소한의 선 유지라는 차원에서 묵인 가능
- 인권재단설립 등 북한 인권 관련 사안과 전단 살포 등 민간 측활동이 남북 간 갈등 및 남남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 상존

3. 대처 방향

- 이런 전망 하에서 올해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 안보태세 강화 속에서도 미중갈등의 불씨가 한반도에서 발화 점을 찾는 일이 없도록 정세의 예의 주시 및 세심한 관리
 - 미국과 담대한 구상의 안보측면 구체화로 제안의 완결성과 실현가능성 제고 및 대미, 대중 설득을 통한 비핵화 협상 재 개 모멘텀 마련 노력 경주
-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독자적 노력 추진도 반드시 필요
 - 민간의 대북 접촉 및 지원에 대한 자율성 제고로 공식적 남북 관계 부재가 완전한 남북관계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 발휘
 - 교류협력 현장 보전과 미래 활용 모멘텀 여지 확보를 위한 신 축적이고 잠정적 계획—기업인 현장 방문 등—시행 추진
 - 통일국민협약 등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사업의 지속을 통해 남남갈등 해소 및 우발적 긴장 고조 예방조치 병행
- 긴 호흡으로 글로벌 도전 사안을 매개로 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촉진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북한의 수요와 인류의 생존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상합될 수 있는 폭넓은 연결 지점 제공
 - * 북한은 그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나. 산하 지구환경기금의 환경분야 대북 지원 결정과

- 그에 따른 제재면제 신청이 유엔안보리에서 거부되는 등 국제사 회의 체계적 대북 견인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관여가 단기적으로 비핵화 등 정치영역에 대한 행태 변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더라도, 중장 기적으로는 정상국가를 향한 학습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과 조정 필요

제2세션: 대남분야_토론 ❷

토론문 북한 대남정책 평가와 2023년 한반도 전망*

리난(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2022년 북한의 여러 담회와 행태들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행태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발견하려는 발표자의 분석과 논평에 상당히 동의한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정권교체 시기에 일련의 주요 행동을 취해왔고 그와 동시에 위기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위기들이 파괴적이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것들은 또한 대회와 관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위기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위기관리, 그리고 북한의 대외 인식과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그럼으로써 한국의 대응 전략이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들에 깊이 동감한다. 현재 북한의 대내, 대외 정국은 냉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동맹으로 인식하고 미국과 한국을 주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사상에 합치하려는 것이며,특히 북한 내부의 지도층과 관료층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9월 이래 한반도의 상황은 한미 군사협력의 확대 및 증대와 북한의 강도 높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기 동안 발사한 것보

^{*} 임의 번역한 비공식 번역문입니다.

다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뿐 아니라 일련의 새로운 '전술 장거리 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그 대응으로 대규모 합동 해상훈련을 실다. 남과 북은 또한 대규모 공군 훈련을 시행했고, 9.19 군사합의는 양측에 의해 폐기된 것처럼 보인다.

2022년 한반도의 상황은 긴장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측은 상대의 행동을 위협으로 보고 그로 인해 그에 대한 맞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어느 한 측의 대응과 조치들은 다른 한 측에 의해서는 도발적으로 인식될 것이고, 상대는 더 강한 조치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대응' 순환은 사실 양측의 주의 깊은 전략적 고려에 따라 주도되는 것이다. 양측중 누구도 갈등을 대규모 수준으로 확대시켜려고 하지는 않는다. 북한입장에서, 북한은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 강도높은 정치적·군사적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입장에서는 합동훈련의 빈도와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한미동맹의 협력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1. 2022년 북한의 행동

2022년 북한의 2022년 북한의 행동들은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의 새로운 상황 하에 북한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보이는 '국방 제일 (defense first)'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었다.

- 164 -

가.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한계선을 긋기 위함이 아니라 한미의 북한을 향한 선제타격을 더욱 제한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작전과 억제 행태(deterrence behaviors)는 더욱 불명확하게 되고, 의도치 않은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사고나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외교는 더 많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나. 선제타격 준비

정기적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와 동등한 급의 미사일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끔 기회를 준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선제타격'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국의 북한을 향한 '적대 정책'의 증거로 보며 이러한 정책은 핵미사일로 방어해야만 한다고 본다. 또한 북한은 현 국제환경이 새로운 보복 조치 없이 핵미사일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고 믿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미중 관계의 악화는 국제사회가 핵개발에 대한 대규모의 대응조치를 이끌어내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유엔안보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사실상 마비되어, 북한은 안보리가 새로운 국제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북한에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활발히 촉진할 기회를 준다.

다. 선제타격 준비

북한은 이미 외교정책의 새로운 길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 이미 자리 잡은 '신냉전'에 맞춰 북한의 외교정책은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중국과 소련에,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무기와 중공업 부문에 의존하던 냉전 시기 회귀하는 행태를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한미와의 장기적 전투에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외교적 구도를 통해북한은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가 어렵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사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확충은, 반미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과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단결된 반제국주의 전선의 건설'이라는 외교적 원칙을 따르는 한편, 미국과의 향후 대화의 조건을 향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라. 대내 단결 강화와 '국방 제일' 전략의 추구

2022년 9월 8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국 방 강화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을 했고, 2022년 12월 26~31일 조선노동 당 중앙위원회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이 한미와의 장기적 대립을 준비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핵무력과 국방에 집중했다. '국방 제일' 전략은 사상의 통일과 긍정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내적 단결의 공고화를 필요로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비해, 군사적 측면에서 긍정적 돌파구는 그 효과가 더욱더 가시적이다. 최근 강화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에 대한 통제 역시 북한이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동원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 166 -

2. 2023년 한반도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격렬해지는 것과 함께, 동북아 지역 역시 극적인 격변을 경험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경향은 한 반도 진영화(극단화, 양극화) 상황의 출현이다.

먼저, 남북 대립과 한반도에서의 대립이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해 왔고, 2022년 이래로 다양한 형태의미사일을 계속 발사해왔다. 북한은 한미를 그 주적으로서 분명히 대해왔고 국방은 국가전략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매우정교한 무기의 개발과 자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진행해 왔다. 종합하자면, 남북 대립과 한반도에서의 대립 패턴이 형성되어왔고, 위기 상황의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북러관계가 급속히 친밀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동안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공했다. 2022년 북한은 미국의 패권을 비판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유엔 투표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편에 굳건하게 서 왔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는 향후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래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

셋째, 북미 대화의 창은 닫혔고 양자 관계는 전략적 교착상태를 향하고 있다. 북한의 시각에서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대북 적대 정책의 연속"이며, 대북 제재는 완화되기는커녕 강화되었다. 이것은 북미 대화가 최소한 바이든 정부 동안에는 재개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한미일 사이의 3자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회복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었다. 윤 정부는 일본에 특사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모임에서 대화와 협의에 반복

적으로 관여해왔다. 미국은 또한 모든 측면에서 양국 사이의 고위급 대화를 조율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복구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도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중요한 발판이다.

다섯째, 미중관계의 악화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을 훼손시켰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고려가 상당히 중첩되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미중 간의 공통 이익과 협조에 대한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현재 악화된 미중관계는 한반도에서 미중 간의 공통 이익이 미중 간의 전략적 게임에 자리를 내주게 하고 있다. 미중 사이 증대된 전략적 의심은 양국이 핵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핵 문제 해결도 더욱 불투명해지게한다. 게다가 한반도에서 누가 '트러블메이커'인가에 대한 인식도 주변국 사이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한·미·일은 그것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미국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관한 주변국 사이의 협력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3. 나가며

위기의 가능성, 특히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새 위기들은 더욱더 공세적이고 파괴적일 것이다. 그것들은 쉽게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에는 남북한과 동북아국가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그 정책적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전략적 대화채널과 대화 기제 수립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위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기회를 찾는 것이다. 이전의 많은 한반도 위기들도 결국은 봉합으로

- 168 -

이어졌는데, 왜냐하면 남북한이나 주변국 중 그 누구도 전면적인 대립으로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 통제가불가능해지기 전에 협상을 향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대화의 기회를 모색했고, 위기 해결이 촉진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효과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해야만 한다. 한중 안보협력은 한국-미국-중국, 한국-북한-중국과 같은 3자, 4자 협력을 건설하면서 일종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다자간 협력 구조 하에서 각 국가의 이해관계들이 고려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외부 압력에 대한노출을 줄일 수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북한연구 시리즈

1.	북한평론	박재규 저	1975
	북한외교론	고병철 외 공저	
	북한무역론	공산권경제연구실 편	
4.	The Politics of North Korea	Jae Kyu Park et., eds.	
5.	북한군사정책론	박웅서 외 공저	1983
6.	북한정치론	박재규 저	1984
7.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 편	1986
8.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Jae Kyu Park et al., eds.	1987
9.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고현욱 외 공저	1987
10.	북한의 법과 법이론	최종고 외 공저	1988
11.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정상훈 외 공저	1990
12.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양재인 외 공저	1990
13.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김일평 외 공저	1991
14.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건설	고병철 외 공저	1992
15.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최청호 외 공저	1993
16.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황의각 외 공저	1995
17.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l External Relations	
		Jae Kyu Park ed.	1999
18.	인터넷과 북한	연구소 외 공편	2000
19.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함택영 외 공저	2000
20.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서대숙 외 공저	2002
21.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4
22.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Byung Chul Koh ed.	2005
23.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6
24.	북한의 노동	양문수 외 공저	2007
25.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7
26.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8.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윤대규 편	2008
29.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윤대규 편	2008
30.	The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 An Institutionalist Perspec	etive Phillip H. Park ed.	2009
31.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윤대규 편	2010
32.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윤대규 편	2009
33.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4.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 35.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이수훈 편 2011
36.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이수훈 편 2011
37.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	이수훈 편 2012
38.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	
39. Nuclear North Korea: Regional Dynamics, Failed Policies, and Id	
, , , , , , , , , , , , , , , , , , , ,	Su Hoon Lee ed. 2012
40.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편 2012
41.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수훈 편 2014
42.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윤대규 편 2015
 43.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연구소 편 2015
44.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윤대규 편 2016
45.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윤대규 편 2016
46.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7.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8. Rebuilding North Korea's Economy: Politics and Policy	Phillip H. Park 2016
49.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	임을출 저 2016
50. 북핵, 오늘과 내일	연구소 편 2016
51. North Korean Tourism: Plans, Propaganda, People, Peace	Dean J. Ouellette 2017
52.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신석호 외 공저 2018
53.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이관세 저 2019
54.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북대북한연구회 편 2019
55.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이관세 저 2020
56.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소 편 2020
57.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박서화 저 2021
58.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	연구소 편 2021
59.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박서화 저 2021
60.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임을출 저 2021
61.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최영준 저 2022
62. 북한 사회주의심리학의 이해	이형종 저 2022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1. 동아세아의 평화와 안보	박재규 편 1974
2.「테크네트로닉」시대의 국제정치	Z. Brzezinski 저 / 박재규 역 1974
3. 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 From Confrontation to Accomi	,
4.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박재규 편 1979
5.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ae Kyu Park ed. 1979
6. 80년대의 미소관계	L. Caldwell et al. / 소련연구실 역 1981
7. 판례중심 국제법	김정건 편 1982
8. U.S-Korean Relations, 1882-1982	Tae-Hwan Kwak et al., eds. 1982
9.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Jae Kyu Park et al., eds. 1983

10. Korea and Indonesia in the Year 2000	Jae Kyu Park et al., eds. 1984
11. SDI와 아시아의 안보	박재규 외 공저 1987
12.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R	Pacific Jae Kyu Park et al., eds. 1987
13. 한국과 미국 1: 정치·안보관계	안병준 편 1988
14. 한국과 미국 2: 경제관계	김덕중 편 1988
15. 한국과 미국 3: 사회·문화관계	임희섭 편 1988
16. 한·미관계의 재조명	김덕중 외 공편 1988
17. Alliance Under Tensi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U.S. Rela	Manwoo Lee et al. 1988
18.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Ronald D. MacLaurin et al. 1989
19.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쿠친스키 외 공편 1990
20.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 Korean-American Dialogu	Manwoo Lee ed. 1993
21. The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nwoo Lee et al., eds. 1993
22. Culture & Development in a New Era and in a Transforming Wor	rld Manwoo Lee et al., eds. 1994
23. 위기의 세계와 한국	연구소 편 1994
24. The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Tae-Hwan Kwak et al., eds. 1996
25.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e 21st Century
	Tae-Hwan Kwak ed. 1997
26.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Tae-Hwan Kwak et al., eds. 1997
27.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서대숙 편 2001
28.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이수훈 편 2009
29. 핵의 국제정치	이수훈 편 2012
30. Northeast Asia's Nuclear Challenges	Su Hoon Lee ed. 2013
31. 동북아 新권력체제와 한반도 정책	이수훈 편 2013
32. South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Lakhvinder Singh ed. 2014
33.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연구소 편 2015
34.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연구소 편 2016
35. 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6. 미중 전략적 경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7. 북중관계: 1945-2020	이상만 외 저 2021
38.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길윤형, 김용민, 조진구 저 2022
통일연구 시리즈	
1.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Tae-Hwan Kwak et al., eds. 1983
2.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ae-Hwan Kwak et al., eds. 1984
3.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김한교 외 공저 1986
4.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구영록 외 공저 1986
5.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양성철 편 1989
6.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외 공저 1991
7.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함택영 외 공저 1992
1	

연구소 편 1996

8.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9.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연구소 편 1996		
10. The Four Powers and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Tae-Hwan Kwak ed. 1997		
11.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곽태환 외 공저 1997		
12.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곽태환 외 공저 1997		
13.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n	math Byung Chul Koh ed. 2002		
1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연구소 편 2004		
15.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Yong-Sup Han 2005		
16.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North Korea	North Korea Modernization Research Group ed. 2010		
17.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이수훈 외 공편 2012		
18. 민주화·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이수훈 외 공편 2014		
19.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16		
20.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연구소 편 2016		
21. 분단 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연구소 편 2016		
22.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21		
한국연구 시리즈			
1.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김호진 외 공저 1989		
2.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Dae-Kyu Yoon 1990		
3.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손호철 외 공저 1991		
4. 인민당연구	심지연 저 1991		
5. 한국정치·사회의 새 흐름	연구소 편 1993		
6.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Dae-Kyu Yoon 2010		
지역연구 시리즈			
4 MULTOLE, OLE TO LITTON OLO LICO DE ELONA	VII. E I I / HETIT OF 4074		
1. 연방주의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무한한 다양성	Valerie Earle ed. / 박재규 역 1974		
2. 미국외교행정의 진로: 미국외교정책기구심사위원회보고서	박재규 외 공역 1976		
3. 비교공산주의정치론	염홍철 편역 1977		
4. 전환기의 동남아세아: 지역정치 및 국제관계	박재규 편 1977		
5. Southeast Asia in Transition: Regional & International Politics	Jae Kyu Park et al., eds. 1977		
6. 인도네시아	동남아지역연구실 저 1983		
7. 동남아정치론	강태훈 외 공저 1983		
8. 중공의 개혁정치: 구조·과정·정책	중·소 연구실 편 1985		
9. 현대 일본의 정치	한배호 외 공저 1986		
10. 현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안택원 편저 1986		
11.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김국진 외 공저 1987		
12. Koreans in North America: New Perspective	Seong Hyong Lee et al., eds. 1988		
13.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정광하 저 1989		
14.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Tae-Hwan Kwak et al., eds. 1991		

15. 소련 16.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17.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18. 독립국가연합(CIS)의 이해	이은순 외 공편 1991 한석태 외 공저 1991 연구소 편 1996 이영형 저 1999
제3세계연구 시리즈	
1.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2. State-Building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3.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4.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5.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6.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염홍철 외 공저 1987 Su-Hoon Lee 1988 이수훈 외 공저 1989 이수훈 외 공저 1989 이수훈 외 공저 1991 김세균 외 공저 1992
번역 시리즈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개정판) 농민혁명 동원에서 혁명으로 제국의 신화 자료집 시리즈	페리 앤더슨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4 제프리 페이지 저 / 강문구 외 공역 1995 찰스 틸리 저 / 양길현 외 공역 1995 잭 스나이더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6
1.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선 2. 지방미군정 자료집 3. 김일성 연구자료집 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5.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연구현황 자료집 I 6.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7.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문서 번역과 과제 -	1991 1993 2001 2004 2006 조진구 2020 조진구 2021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 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조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함 사건'사과'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헌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성윤(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슈(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무수(북하대학원대학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기자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 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4 (2019. 8)

제 목: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5 (2019. 11)

제 목: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발표자: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6 (2020. 6)

제 목: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발표자: 권태준(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이정철(숭실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7 (2020. 11)

제 목: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발표자: 이왕휘(아주대 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인제대 교수)

최순미(아주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8 (2021, 1)

제 목: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발표자: 정영철(서강대 교수)

사카이 다카시(前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자: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장)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한동대 교수)

안경모(국방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숭실대 교수) 김영희(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홍열(한양대 교수)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차우(일본 테이쿄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9 (2022. 1)

제 목: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안경모(국방대 교수)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0 (2022. 6)

제 목: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발표자: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이웅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1 (2023. 1)

제 목: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애(길림대 교수)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웅현(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난(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회원가입 안내

■ 회 비

● 1년 회비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재 가 입: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평생회비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납부방법: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우체국 온라인: 014233-05-000905 (예금주: 경남대학교)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우)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박현정 전화: 02-3700-0725, 팩스: 02-3700-0722

E-mail: pedia@kyungnam.ac.kr

Homepage: http://ifes.kyungnam.ac.kr

※ 회원기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신청서**

분 류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개인평생회원 □ 기관평생회원	
성명(기관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자택주소	휴대폰 :	
	E-mail:	
직장(학교) 주소 및 직위	□□□□□ 직위 : 전화:() -	
우편물발송	□ 직장(학교) □ 자택	
학력사항	대학교 과 🗆 석사 🗆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 대학교 과 🗆 석사 🗆 박사학위 (연도)	
전공 및 관심 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경력		
가입권유인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인)



